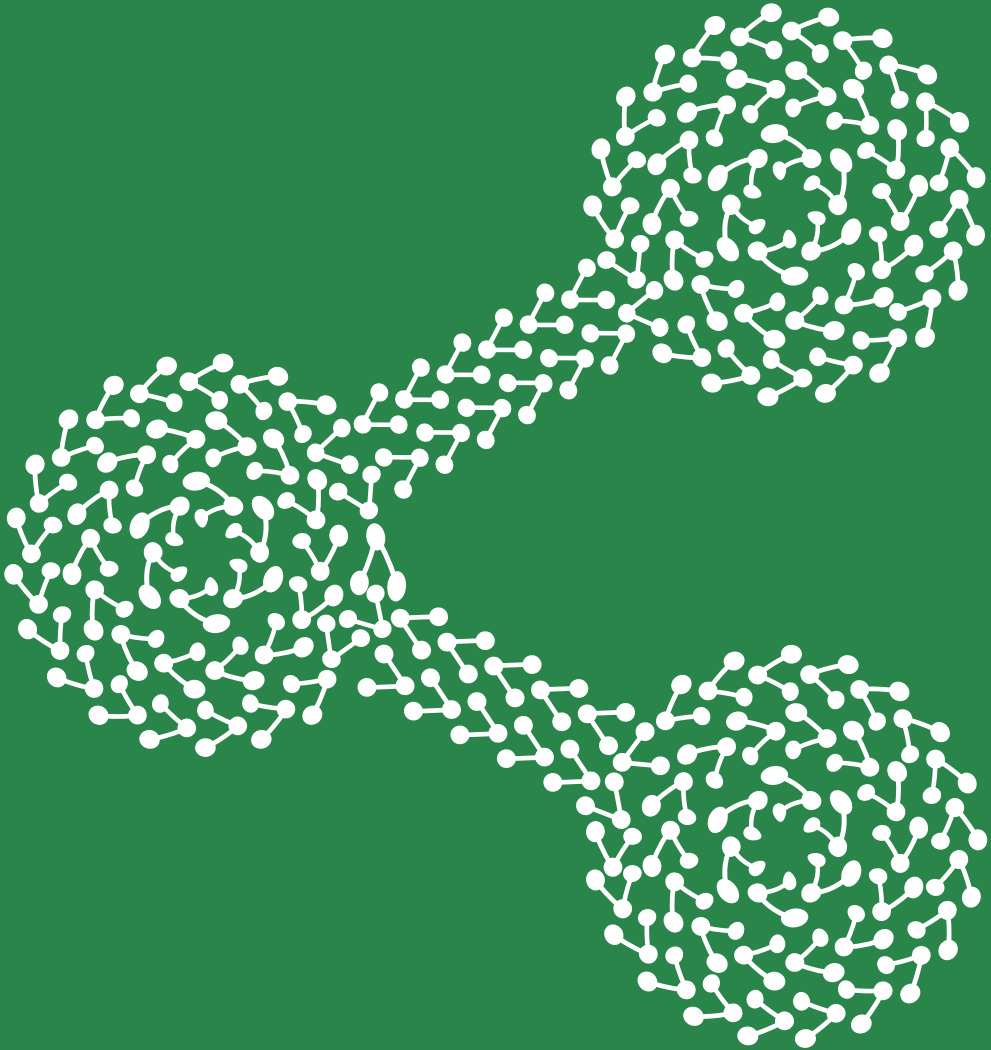


공유의 시대

경계를 넘어 개방과 공유로

통권 제 395 호 | 2021

도시
관





통권 제395호 | 2021

공유의 시대

경계를 넘어 개방과 공유로

들어가기 전에

공유의 시대 경계를 넘어 개방과 공유로

‘체인 도서관’^{chained library}을 들어보셨나요? 중세 유럽 여러 나라에 있었던 도서관입니다. 책과 책장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까지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로 된 체인으로 책장에 묶인 책을 읽고, 부득이하게 꺼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사서가 열쇠로 열어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책이 귀했던 시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공여지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후 도서관들이 책을 대출함으로써 책의 공유를 실현했지만, 체인 도서관은 누군가에게 그 잠시 대출되는 동안의 소유도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공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과거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그 소유의 확장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시대의 도서관은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공유와 개방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공유를 토대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도서관』 제395호의 주제는 ‘공유’입니다.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지만 그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은 공유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이 제한적인 요즘의 공유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부를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표적인 지식 공유 활동인 오픈액세스 운동, 행정학적 측면에서의 공공자원과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가치를 알아보고, 개방을 위한 법·제도적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유 서비스의 사례와 ‘사회적 독서’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경험의 공유, 시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록의 공유 등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집필진의 시각으로 도서관의 공유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호가 도서관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자원·경험·지식의 공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논고

총론 - 공유의 가치

위기의 시대, 새로운 일상을 위한 공유의 힘 10

이승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도서관과 공공성

도서관, 본질로서의 '공유' 30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팀장

오픈액세스

코로나19 시대의 오픈액세스 출판 실천을 위한 54

도서관의 역할

박서현·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공공자원

공공자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서비스 74

김영미·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법·제도

오픈액세스를 통한 지식의 공유와 저작권 98

안효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간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가치 124

임호균·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 개방과 공유 서비스 148

김혜련 외·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경험

사회적 독서와 도서관 문화 170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인터뷰

네트워크

도서관, 시민의 기억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184

이호신·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교수

임봉성·파주시중앙도서관 기록관리팀 팀장

추천 자료

집필진 추천 자료 204

본 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



총론 - 공유의 가치

위기의 시대, 새로운 일상을 위한 공유의 힘

이승원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일상의 위기

위기, 그리고 새로운 일상

흔히 코로나19로 뒤틀린 세상을 새로운 표준, ‘뉴노멀’*new normal*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뉴노멀이 지배할 우리의 새로운 일상은 어떤 것일까? 뉴노멀과 새로운 일상에 대한 고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의 근본을 흔들었다. 이로 인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복지 체제에 위기가 도래했고,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에 기성 정치 질서와 민주적 합의에 도전하는 포퓰리즘 형태의 새로운 정치가 등장



했다.¹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자 복지 체제와 사회적 자본의 힘은 급속히 약해졌다.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로 강조되는 개인의 자산 보유 능력이 중요해졌고, 그 결과 다수의 사람은 기존의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새로운 일상을 태동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복지 체제의 붕괴와 포퓰리즘의 발흥, 자산 중심의 일상은 새로운 일상을 향한 정치·사회적 요구와 실천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로 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은 서구 사회는 물론,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방식과 층위의 실천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으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와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는 실천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자활, 공동체 자산화 운동, 상호부조, 지역 화폐와 지역순환경제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복원하고 이윤보다 노동의 가치와 공생공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혁신은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근대 주체의 전통적 역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불평등, 민주주의 후퇴, 기후 온난화 등)를 참여예산, 메이커 운동, 시민 과학 기술, 분산형 에너지 생산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수평적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실천을 뜻한다.

1. 오랫동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연구해온 정치철학자 샬탈 무페는 2008년 이후 엘리트 주도 대의제 정치와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로 인해 무너진 민주주의 정치의 틈새에서 포퓰리즘이 좌우정치를 넘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페의 책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문학세계사, 2019)를 참고.

지난 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사회 혁신 운동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이 활성화되었다. 비록 행정 및 제도적 장벽의 한계는 있지만,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자산화, 기후 온난화 극복을 위한 생태적 실천, 플랫폼 경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 여러 창조적 실천이 대안적 일상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이러한 실천들이 활발해지는 까닭은 이 실천들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암울함과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공유의 힘

새로운 대응의 공통점, 공유 활동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은 부의 축적과 양적 성장을 목표로, 이윤·효율성·경쟁을 삶의 양식과 가치이자 표준처럼 지켜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낡은 일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며 그 한계가 드러났다.

낡은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근대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도다.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은 자신의 책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력적 공유사회 collaborative commons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며 대량 생산이 아닌 대중 생산을 통해 소유권보다 접근



권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² 엘리너 오스트롬 Elinor Ostrom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적 소유와 사유화라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넘어 시민의 공동체적 협력 방식으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의 필요성과 효과를 제시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³

그림 1 엘리너 오스트롬



출처: Wikimedia Commons(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obel_Prize_2009_Press_Conference_KVA-31.jpg)

볼로냐의 ‘함께-볼로냐’CO-Bologna와 겐트의 전환 계획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의 실천은 우선 이탈리아 볼로냐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볼로냐 정부는 도시 정책 싱크 탱크인 랩거브 Laboratory for the Governance of the Commons: LabGov와 함께 「도시 커먼즈 urban commons의 돌봄과 재생을 위한 시민과 도시 간 협력에 대한 규약」Bologna Regulation을 체결했다. 이 규약은 지역 내에서 누구든 지역 공유자원에 대해 커먼즈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볼로냐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커먼즈로서의 지역 공유자원의 범위와 내용의 사례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 규약은 상호 신뢰, 공공성과 투명성, 시와 시민의 책임, 포용

2. 리프킨, 제레미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민음사.

3. 오스트롬, 엘리너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알에이치코리아.

성과 개방성, 지속 가능성, 비례원칙, 타당성과 차별성, 비공식성, 시민 자율성 등 9개 일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시민 사이 5단계 협력 거버넌스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협력 거버넌스가 영향을 줄 장소와 방식을 매핑하고, 2단계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행위자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의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3단계에서는 각 과제를 설계한 원리를 실험적으로 적용할 해결책의 프로토타입을 구성하고, 4단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실험하여 긍정적 결과를 확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실험의 결과를 평가한다.

이 협력 거버넌스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 사회주택의 공동 협력 주택으로의 전환, 학부모 참여형 유치원 개선 프로그램, 도시 텃밭 프로그램, 공공 디지털 플랫폼 창출 등 볼로냐에서 시행되는 280여 개의 크고 작은 ‘함께-볼로냐’ CO-Bologna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다.

‘함께-볼로냐’는 볼로냐 자체를 시민 모두의 공유자원으로 정의하면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주민이 스스로 생산하고 *making together*, 참여 사업들이 함께 성장하며 *growing together* 각종 서비스의 적절한 분배와 관리로 함께 살아가는 *living together* 민관 협치 기반 공동체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공유의 대상이 도시 자체에서 공공 서비스와 자원까지 포괄적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⁴

또 다른 사례는 벨기에 겐트 *Gh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겐트는 P2P 재단 *Peer2Peer Foundation*과 협력하여 ‘겐트를 위한 커먼즈 이행 계획’ *Commons Transition Plan for the City of Ghent*를 마련했다. 이 계획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장 실패로 인한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긴축재정 상황에 겐트 정부가 대응하는 정책 구상의 하나였다. 또한 이 계획은 겐트

4. LabGov (n.d.). Bologna lab. LabGov.City. Available: <https://labgov.city/explore-by-lab/bolognalab>



에 있는 다양한 공유자원 및 공동체 관리 실천 유형들을 파악하고 활성화 하면서 이 유형들 사이 유기적 연결을 통해 겐트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참여 민주적인 마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식량, 주거, 교통, 교육, 에너지, 돌봄 등 여러 부분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500여 개 공유자원 및 공동체에 대한 관리 실천 유형을 조사하고, 이들과 함께 수십 차례 워크숍을 통해 겐트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이 유형에는 먹거리와 에너지 공유 자원 관리로서의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⁵EnerGent with REScoop⁵과 ‘돼지 농장’⁶Het Spilvarken⁶, 공간 커먼즈로서의 ‘시민 공공공원’⁷Criemaster Park, ‘겐트 공동체 토지신탁’⁷CLT Ghent⁷, ‘NEST’⁷Newly Established State of Temporality 등이 있다. 이 계획은 이러한 유형들을 이행 계획의 일부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공유가치와 다중심적 협력 거버넌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 정부가 ‘파트너 도시’⁷partner city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유서울, 그리고 한국의 커먼즈 운동 사례

2012년 서울시는 ‘공유서울’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공포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21년 7월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유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활동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공간, 교통, 물건, 정보 등의 분야에서 주차장, 공공시설 유희 공간, 나눔카, 장난감, 공공자전거(따릉이), 공공 데이터 등

5. 태양광에너지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energent.be>)

6. 돼지농장 홈페이지(<https://hetspilvarken.be>)

7. 겐트 공동체 토지신탁 홈페이지(<http://cltgent.be>)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기업·공유단체를 육성·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구 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 서울시의 이러한 혁신적 정책 실험은 세계 여러 도시로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2020년에는 볼로냐와 바르셀로나 정부, 공유도시연합Sharing Cities Alliance, 공유도시행동Sharing Cities Action, Shareable⁸, P2P 재단,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등 공유와 커먼즈 활동을 전개하는 주요 도시 정부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와 이후 공유도시들의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서울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기도 했다.⁹ 이러한 서울시의 공유도시 사업은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촉진 조례’ 제정 및 시민의 자율적인 공유 활동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¹⁰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정책은 ‘공유’를 표방한 창업 활동 지원 또는 유휴 공공자원·공간의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정도일 뿐, 여전히 공유의 가치와 정책은 주변 정책이나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시민의 공유 활동과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¹¹ 인천 배다리 마을, 서울 공덕역 인근 경의선 공유지, 제주 강정마을 등 공유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려는 시민과 지역의 공유자원이나 가치보다 개발 및 안보를 우선하는 행정 권력 사이에서 충돌과 갈등이 크게 발생

8. Sharing Cities Alliance와 Sharing Cities Action은 각각 암스테르담과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여러 공유활동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도시 운동’ 네트워크다.

9. 이승원, *닐 고렌플로 편집 (2021).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와 이후 공유도시들의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서울 제안서*. 서울특별시.

10. 2021년 7월 현재, 서울시 24개 기초지자체(강남구 제외) 및 서울시 외 44개 광역·기초지자체가 공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11. 서울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에 공유의 의미를 확장하고 커먼즈 가치를 적용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혁신적으로 수립했다. 3기 기본계획은 유휴 자원 공유나 공유기업 지원 수준에 머물던 공유서울 정책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 순환 및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함”을 목표로 심화시켰다. 그러나 계획 수립 도중 서울시장의 유고와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3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왔다. 또한 공유성복원탁회의, 농부시장 마르쉐, 해빛투게더협동조합,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위스태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차원에서 글로벌 위기 대응과 생태·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와 협력 수준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¹² 앞서 나가는 시민들의 실천력에 조응하는 수준 높은 민관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공유와 커먼즈

‘공유’를 넘어 ‘커먼즈’^{commons}로

지금까지 소개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공유란 단지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유가 개인이 아닌 집단적 소유권, 혹은 국가 소유권을 강종하는 사회주의 모델의 변형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공유는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대리 소유하는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 公有이기도 하고, 특정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함께 관리하고 향유하는 ‘공유’^{common sharing}, 共有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의 의미를 보다 엄밀하면서도 실천적으로 다루기 위해 ‘公有’와 ‘共有’가 그 양면을 차지하는 커먼즈^{commons}의 개념을 살펴

12. 공유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om34ggqylcFwLhGPwd3iFg>), 제주 선흘리 사례는 최현, 정영신, 윤여일의 책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진인진, 2021) 4장 ‘커먼즈론을 통해 본 선흘리 마을과 숲의 역사적 변동’을 참조.

불 필요가 있다.¹³ 커먼즈에 관한 최소 정의는 ‘하나의 의사결정이 배타적인 자격을 행사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Kip, 2015) 그러나 커먼즈는 자원만이 아니라 자원을 생산·사용·관리하는 자들이 형성한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와 자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규범·규칙·의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커먼즈의 구성 요소로서 자원은 공동체 구성원, 지역 시민이 공동체와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자원**을 의미한다. 이 공유자원은 공동체의 최소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 자원으로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자원을 일컫는다. 공동우물, 공동목장, 공동어장 등의 전통적 공유자원은 점차 고갈될 수밖에 없어서 감소와 희소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현대사회의 커먼즈는 무한 복제와 무한 사용의 영역을 포함한다. 이것은 오늘날 커먼즈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활동이 비단 자원을 아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원 공유의 끝없는 확장을 통해 공동체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의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태양광 에너지나 전자기파의 무한 사용, 각종 지식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및 도구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등의 무한 복제와 공유는 기존 생산과 상품 교환 시스템을 벗어난 새로운 필요-생산-사용 관계를 가능케하면서 대안적 삶과 새로운 일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이승원, 2019)

커먼즈의 구성 요소 중 **공동체**란, 공유자원을 분배하고 스스로 이 자원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De Angelis & Stavrides, 2010) 희소성과 감소라는 전통적 공유자원의 특징은 배제성이 높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

13. ‘커먼즈’(commons)는 ‘공동자원’, ‘공유재’, ‘공유지’, ‘공동자원’, ‘공동체’, ‘공동자원 체계’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이승원의 논문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공간과 사회, 68, 2019)을 참조.



회에서 공동체 에너지, 지역 문화예술 공간, 마을 놀이터나 공동 텃밭, 공동체 주택, 공동체 금융 등 다양한 커먼즈 공동체는 상이한 공유자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개방적이고 임의적이며 우연적이라는 조합의 특징을 갖는다. 무한 사용과 복제가 가능한 새로운 공유자원의 등장은 커먼즈 공동체의 개방성 수준을 한층 높인다.

커먼즈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규칙** 또는 **규범**은 공동체의 공유자원을 보호하고, 공유하는 방식과 거버넌스다.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8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다.¹⁴ 커먼즈의 규칙과 규범은 일종의 윤리적 행위와 문화적 의례를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이 규칙과 규범은 단순히 실용적인 합의나 계약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 철학적 차원을 담고 있다. 과거 영국의 빈민 생계 자급권을 위한 삼림헌장이나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이익을 고려한 우리 민법 제302조(특수지역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커먼즈의 규칙과 규범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을 우선 고려한다. 이 전통은 오늘날 공유, 나아가 커먼즈가 왜 코로나19는 물론,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새로운 일상의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유자원, 공동체, 규범의 복합체로서 커먼즈는 공동체의 회복력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의지를 실현할 역량을 높이는 실천적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커먼즈 규칙과 규범이 도덕철학적 차원에서 숙고되어야 하는 것은 이것들이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젠더 불평등이나 인종차별, 그림자 노동 등이 암묵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칙과 규범에 대한 도덕철학적 비판과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

14. 오스트롬이 제시한 8가지 디자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 장치, 4. 감시 활동, 5. 점증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스트롬의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2010, 알에이치 코리아)를 참조.

커먼즈와 공유경제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이 구성 요소의 외형상 특징 때문에 커먼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이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여기에서 잠시 커먼즈와 공유경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공유경제는 ‘유휴 자원’, ‘동료 사용자’, ‘플랫폼’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 그런데 이 유휴 자원은 동료 사용자들의 공동자원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각자의 필요와 부를 충족하는 ‘사적으로 소유된’ 자원이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유휴 자원을 거래하는 동료 사용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익명의 개개인으로 존재한다. 또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유휴 자원을 사용할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공유경제는 ‘플랫폼 경제’를 ‘공유’라는 긍정적 수식으로 포장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와 커먼즈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은 ‘플랫폼의 규칙을 누가 정하는가?’다. 커먼즈를 둘러싼 규칙은 사용자들이 정한다. 물론 이 사용자들 사이에는 전통적이고 위계적이며 차별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동료 사용자들(사실상 플랫폼의 유료 소비자들)은 플랫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플랫폼 소유자에게 배타적 권한이 주어진다. 택시 승차, 음식 배달 디지털 플랫폼은 물론 구글과 같은 정보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주로 이 플랫폼의 가치를 누가 올리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사용과 개인정보 및 데이터 공유의 누적 사실상 그 가치 창조 핵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도가 클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오를수록 플랫폼은 되레 독점화 되고 소유권 또한 배타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회화하거나 커먼즈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¹⁵

복합적이고 포용적인 공유 활동

커먼즈 개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유에 대한 사고의 폭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넓혀준다. 커먼즈 차원에서 볼 때, 공유를 둘러싼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원의 공유 활동이다. 이것은 공동체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생산하는 활동이다. 둘째는 이익공유 활동이다. 자원공유 활동은 그 과정에서 특정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태적 가치와 환경의 복원,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자원 공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이익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공유가 일부 집단에 배타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 실현 활동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바로 이 보편적 가치 실현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가치순환을 위한 활동이다. 이 가치순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후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지구 생태계 위기를 더욱 효과적이고 능

15. 이 내용은 이승원의 논문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공간과 사회, 68, 2019) 각주 3을 일부 수정하여 실은 것이다.

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공유-이익공유-가치순환**의 활동은 상호 연계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서로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2 범주별 공유 활동



출처: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 47쪽

공유 활동의 단계적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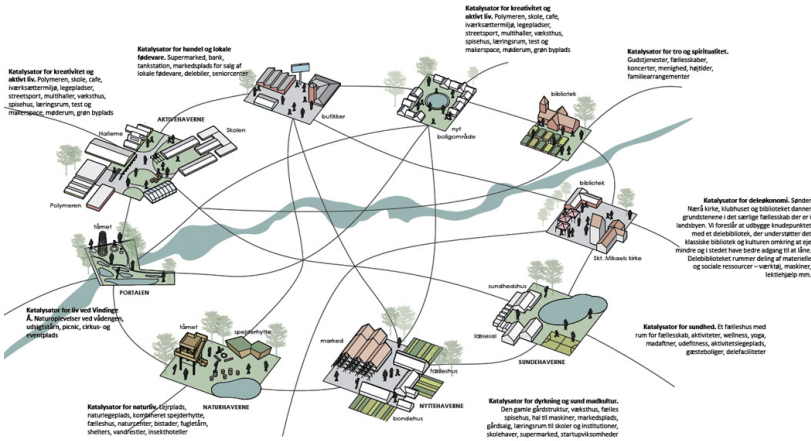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공유 활동은 커먼즈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단계별 층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게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공유 활동은 **공유 자원의 확보와 공유 기반의 조성**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자본이 개입할 시장의 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감축과 재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공적 책임을 줄이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사영화(민영화



혹은 상품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서구 사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공공재의 상품화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으로서의 공공재,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할 기본적인 공공재가 상품으로 변질되면서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노동(이마저도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 위험 노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더욱 나빠졌다)으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공유자원의 확보와 공유 기반의 조성이란 사영화되고 상품화된 공공재를 다시 ‘공공재의 위치’로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이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이 아닌, 존재 그 자체의 기본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다음 단계에서 공유 활동은 두 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 축에서는 사적 상품에서 회복된 공공재가 정부의 행정 관료적 방식으로 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채 방치되지 않고 실제 공유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공유 활동 민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지역 내 여러 **공유자원의 상호보완적이고 순환적 연결을 통해 개인의 새로운 일상 동선과 공유 생태계 원형**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방성이 중요하다. 공유 활동이 특정 집단의 폐쇄적 이익 분배 활동이 아니라 개방적일 때, 민관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다중심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유활동과 공유자원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resilience)과 시민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주택과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및 공유 체계, 먹거리 공유 및 지역 자원 순환 시스템, 공공 임대상가와 지역 화폐, 그리고 학교와 예술 공간, 마을 놀이터 등이 연결되고 그 활동이 순환될 때 새로운 일상을 위한 조건이 창조될 수 있다.

그림 3 지역 자원의 연결을 통한 마을 일상의 동선 예시



출처: MASU Planning(<https://masuplanning.com/project/suburb-of-communities>)

세 번째 단계에서 공유활동은 **공유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일상의 확산과 지역사회 및 도시의 공유적 전환**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것은 한 지역에서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적·사회적 기반이 권리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 공간은 돌봄, 의료, 교육, 노동, 생산, 놀이, 문화예술, 건강, 참여, 교통, 교류와 교환 등 다양한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원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다양한 정체성과 신체적 조건에 맞게 변형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자원들이 ‘공유’ 자원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지 저렴한 주거 공간에 고립되지 않고, 지역의 공유 생태계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나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공유적 전환은 경제와 복지 서비스 기반만 아니라 윤리·문화·사회경제적 전환과 도덕·철학 차원에서의 지적 성찰을 포함하는 총체적 패러다임 이동을 지향한다. 즉 이것은 GDP 중심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양적



성장, 경쟁, 추격형 모델,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우정, 환대, 다양성과 차이, 집단지성,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생산, 개방성, 탈 성장과 생태적 공생공락,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천을 구현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위기는 새롭게 다뤄질 것이고, 위기의 징후에 대한 관리만이 아니라 그 원인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면서 대안적 뉴노멀과 새로운 일상의 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공유 활동의 촉진자, 도서관

지금까지 공유활동의 복합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위기 시대에 공유가 주목받게 된 배경과 이유를 찾아보았다. 그 핵심은 공유란 공유자원-공동체-규칙과 규범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얽혀있는 커먼즈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공유활동은 **자원공유-이익공유-가치순환**, 그리고 **공공재 확보-공유자원화와 연결-자원의 선순환과 공유적 도시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유활동은 선형적으로 미리 결정된 속성과 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자신이 겪는 일상의 고통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위에서 설명한 공유의 차원과 단계 속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활동에 공유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의 차원과 단계에서 연결 및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쌓여가는 경험과 지식의 공유, 그리고 집단지성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더 친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민주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덕·철학

적 지성과 문화-윤리적 감수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지식 공유와 집단지성은 공유 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작동하지만, 특히 지역 도서관은 이것을 촉진 *facilitating* 하는 주요 공유 기반이자 거점이 될 수 있다. 이 역할을 위해 도서관은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익히는 방식에 대한 혁신적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출발하고, 여러 실천이 연결되고, 그 결과가 집대성되며 공유되는 거점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만이 아닌 대학도서관, 그리고 특정한 목적의 전문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미 수많은 마을 도서관이 ‘공유’*公有*에서 ‘공유’*共有*로, 지역 주민이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가는 마을 공유자원으로 재탄생(도서관의 공유자원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공유 활동이 지역에서 연결되는 열린 거점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이 새로운 변화는 마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Jorge Luis Borges*의 대표작 『픽션들』(1944년)에서 ‘우주’로 묘사된 ‘바벨의 도서관’을 떠올리게 한다. 수많은 마을 도서관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마주침과 연결을 통해 함께 집단지성의 힘을 키우고,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일상을 창조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도서관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지만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의 소유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리프킨, 제레미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민음사.
- 맥퍼슨, C. B. (2010).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 이론. 박영사.
- 무페, 샹탈 (2019).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문학세계사.
- 박배균, 이승원, 김상철, 정기황 편 (2021).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 공유 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기획). 빨간소금.
- 보르헤스, 호르헤 루이스 (1997). 픽션들. 보르헤스 전집, 2. 민음사.
- 볼리어, 데이비드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갈무리.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
- 오스트롬, 엘리너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알에이치코리아.
- 이승원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 사회, 68, 134-174.
- 이승원, 닐 고렌플로 편집 (2021).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와 이후 공유 도시들의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서울 제안서. 서울특별시.
- 최현, 정영신, 윤여일 편저 (2021).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4. 진인진.
- 피케티, 토마 (2014).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 피케티, 토마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총론 - 공유의 가치

- De Angelis, M. & Stavrides, S. (2010). On the commons: a public interview with Massimo De Angelis and Stravos Stavrides. *An Architektur & E-flux Journal*, 17, 4-7.
- European Innovation Council.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2021. <https://eusic.challenges.org>
- European Union (2020). Social Innovation: Inspirational Practices Supporting People Throughout Their Lives. Publication Office of European Union. Availabl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8&langId=en&pubId=8352&furtherPubs=ye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Collective Brain. Retrieved July 25, 2021. <http://ssecollectivebrain.net>
- Kip, M. eds. et al. (2015).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aurverlag.
- LabGov (n.d.). Bologna lab. LabGov.City. Available: <https://labgov.city/explore-by-lab/bolognalab>
- Masu Planning (n.d.). Suburb of 100 communities. Available: <https://www.masuplanning.com/project/suburb-of-communities>





도서관과 공공성

도서관, 본질로서의 ‘공유’

신정아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팀장

인류의 기록 문명이 도래한 이후, 도서관은 그 시대의 지식을 수집하여 전승하는 일을 수행해왔다. 그 기본 역할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도서관의 본질’에 대해 고민한다. 도서관의 본질, 즉 정체성과 가치를 고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시대마다 도서관에 부여했던 새로운 역할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이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시대에 따라 지식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방법과 가치가 부여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과 도서관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사서에게는 당연한 ‘도서관은 만인에게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담보하는 곳이다’라는 정의가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고, 생각하는 시민에게도 통용되는 상식인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들의 경험치만큼 그 기관을 이해하기 마련이다.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환경과 신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로 변화하는 도서관에서 다시 '도서관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서관의 역할 확장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인류 문명사 발전과 함께 한 도서관

'본질'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으로,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의 본질은 도서관이 도서관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성질이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성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변천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오래전, 인류는 기억해야 할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문자 발명 전에는 그림이나 사람의 입을 통해 중요한 지식과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승했다. 문자가 발명되고부터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록들을 수집·보존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도서관이 탄생하였다.

고대(BC. 3000~AD. 476) 도서관은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왕실이나 신전 안에 있었고 소수의 지배층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고대 도서관은 기원전 300년경 구축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원 아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망라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중세 시대(476~1492) 도서관은 동서양 모두 종교 시설의 부속 건물이었다. 도서관은 필사본을 비롯한 고전 자료를 수집·보존·해석하는 보고로

귀족 및 성직자들만 이용하였다. 근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도서관은 당대의 지식을 집적하고, 특정 일부 계층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특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1492~1789) 도서관은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유의지와 계몽사상을 전파하는 데 공헌하였다. 도서관이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한다.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던 지식정보가 금속활자와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대중화되었다. 이에 회원제 도서관이나 유료 대출 도서관과 같은 형태의 도서관이 등장했다.

19세기에는 공비 운영, 무료 제공, 만인 공개성을 이념으로 삼은 도서관이 탄생하였다. 특히 카네기¹가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 공공도서관 설립을 지원하며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1850년에 공포된 영국 「도서관 및 박물관 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은 세금에 의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도서관의 무료 공개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세계 도서관 법제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 도서관은 경제 성장, 과학 기술의 발전, 정치적 안정에 따라 대중을 위한 지식정보 센터,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평생교육의 장, 민주주의 요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도서관도 고려~조선 시대에는 왕실 기관을 통해 서적을 편찬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일제강점기에 근대 도서관이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인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1990년 문화부 출범을 계기로 각종 진행 정책에 힘입어 도서관 수가 급증

1.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는 미국의 철강 재벌로 철강 산업으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도서관을 짓는 데 기부하였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책을 통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공공도서관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3,000여 개의 도서관을 짓는 데 지원하였다.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희운은 『도서관 지식문화사』(2019)에서 ‘도서관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사적 측면에서 우연의 부산물이 아니라 필연적 창조물이며 진화와 변용의 결과’라고 하였다. 도서관은 고대에서 현재로 발전해 오는 동안 개인 소유 기록저장소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무료 공공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기관으로 거듭났다. 자료 매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토판에서 파피루스, 종이책, 전자 자료 등으로 진화하고, 서비스 대상은 특정 소수에서 모든 대중으로 확대되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발전 배경은 다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다.

현재 도서관²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본질은, 지식과 문화에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 관문으로의 도서관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설명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에서 발간한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1994)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선언은 공공도서관이 준수해야 할 목표와 전 세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할 서비스를 표명한다.

2. 도서관은 발달 과정에서 그 사명, 목적, 이용자 집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관중에 따라 온·오프라인 환경이나 서비스 특성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에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의미한다. 필자는 공공도서관의 상황을 기반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집단의 평생학습, 자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만인 공개, 무료 이용, 공공재원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역의 정보센터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균등한 접근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어떤 이유로든 정규 서비스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소수민족, 장애인 또는 입원 환자나 수감자와 같은 이용자에게 대하여 특수 서비스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장서와 서비스는 전통적인 자료는 물론 모든 종류의 매체와 현대적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자료는 인류가 이룩해 온 정신적 유산은 물론 최신의 경향이나 사회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의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출처: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https://www.ifla.org>)

『공공도서관 선언』을 기반으로 마련된 『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2011 개정판)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수행해야 할 역할과 서비스를 보여준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도서관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정보자원의 접근을 제공함은 물론 정보를 수집, 조직,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기억을 저장하고 지역사회의 현안 논의나 정책 결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술이 가져온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한다. 이때 일반 대중의 정보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정보의 자유에 대해 공공도서관은 인간의 경험과 견해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하며 검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용자 모두를 위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4. 각 도서관의 장서는 어느 정도 도서관 고유의 것이지만 모든 장서를 갖출 수 없으니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5. 공공도서관은 기회균등의 기관이며, 디지털 시대 정보전자관문이 되어 기술 발전이 초래한 사회적 배제와 소외에 대하여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전자형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접근권을 제공하고 공공도서관은 중개자가 되어야 한다.

『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리하자면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 조직,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보격차 해소, 자유로운 접근, 자원 공유,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도서관’이란 단어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장서, 도서관 직원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의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Gorman, 2010)

도서관이 갖는 공공성의 가치

도서관은 인류의 지식을 수집, 조직, 축적하여 거기에 접속하는 길을 안내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우리는 이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속에서 평등한 접근, 정보 공유, 정보격차 해소 등의 다양한 공공성을 보여주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은 공개성, 공정성, 공평성, 공익성 등을 포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공공성(公共性)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말한다. 즉, 공공성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생활이나 사적인 것(the private)과 구분되는 공동체의(common), 공동의(public), 널리 공개된(open) 성질을 가리킨다. 공공성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시대와 사회, 분야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시민과 연관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공공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공성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시민의 삶을 지속해나갈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가치다. 다수의 사람과 연관된 문제라면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공성의 논리다.(하승우, 2014) 반면, 이와 같은 공공성 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성질을 잃을 수 있다. 한때 공공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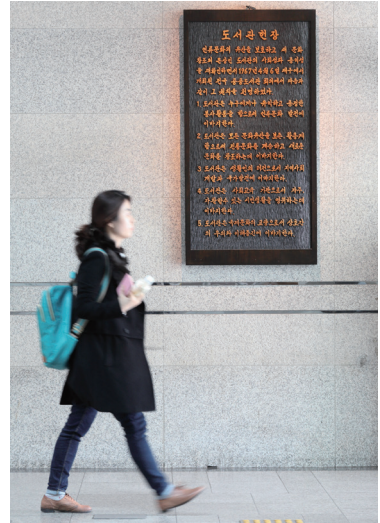


에 속해 있던 사회기반시설이 자본과 경제발전을 이유로 사유화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 운영되는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가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경제적 논리에 의해 공공장소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공간의 사유화는 시민을 사적인 개인으로 분리해 소비자로 전락하게 한다. 또 사회 공론장의 형성 자체를 방해해 시민이 함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가능성을 줄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조한상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2009)를 통해 공공성의 3요소를 시민, 공공복리, 공개성으로 정리하였다. 공공성은 첫째, 사회를 이루는 시민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둘째,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복리를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판단하는 의사소통의 과정, 즉 공개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서관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시알리 라맘리타 랑가나단 Shiyali Ramamrita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1931)에 공공성의 3요소가 잘 드러난다. 시민 중심은 2법칙과 4법칙, 5법칙에서, 공공복리는 1법칙과 2법칙에서, 공개성은 4법칙과 5법칙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수원 선경도서관 로비



출처: 선경도서관 20년

- 제1법칙**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use.
- 제2법칙**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책을. Every person his or her book.
- 제3법칙** 모든 책에 독자를. Every book its reader.
- 제4법칙**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Save time of the reader.
-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 The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하승우는 『공공성』(2014)에서 ‘도서관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류의 지혜를 저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되고, 이들이 실제로 그 지혜를 활용한다면 시민의 성장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서관은 유무형의 자료와 매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로 시장성 있는 재화를 공공재로 전환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해 공공성을 창출한다.(스프링어, 튀르팡, 2021) 더불어 독서와 사색 등의 지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관심사를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도서관은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지식의 공유를 위한 도서관의 활동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공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도서관이 소장한 유무형의 지식정보자원을 바탕으로 물건 공유, 주차장, 세미나실



등의 공간 공유, 상호대차 서비스, 참고 서비스와 같은 지식정보 공유 등을 실현해오고 있다.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무형의 지식 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지식 대중화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은 모두 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공평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접근의 공평성은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지식, 정보 형태에 상관없이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의 힘은 강력하다. 역사를 통틀어 부자와 권력자들은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불평등을 영속시키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식의 공유는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 및 정치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처럼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누구나 공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은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근절하고, 농업을 개선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건강, 문화, 연구와 혁신을 지원해 사람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IFLA. 모두를 위한 접근과 기회: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도서관 행동 지침³

3. 한국도서관협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배포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도서관 행동 지침”을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공동 추진 목표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IFLA는 정보통신 기술(CTs)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UN2030 의제⁴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사람들의 삶을 향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원 공유는 하나의 도서관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없어서 개별 기관에서 소장하지 않는 자원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공동으로 자료와 서비스를 공유하는 도서관의 조직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원 공유의 방식은 지식정보자원을 기술해주는 메타데이터나 유무형의 지식정보자원 그 자체, 물리적 공간, 더 나아가 도서관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자원 공유를 위한 도서관의 접근 방식은 도서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현재 도서관들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 정보 공유를 수행하고 있는 운영 사례다.

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한 다른 도서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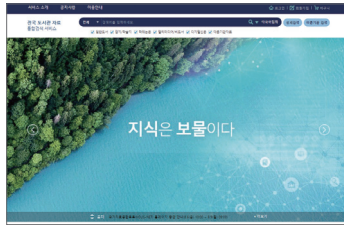
도서관은 사람들이 지식정보자원을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목 작업(cataloging)을 수행한다. 초창기 도서관들은 도서관마다 들어오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편목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출판물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도서관과 함께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종합목록(Union catalog)은 목록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식정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동일한 서지 구축에 중복 투자되는 시간과 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용자 입장

4. 2015년부터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추진하고 있다.



에서는 종합목록을 통해 타관에서 소장한 자료를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고, 소장처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호대차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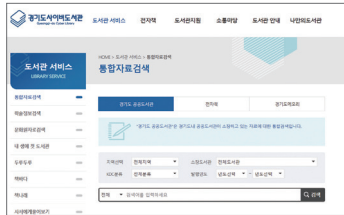
그림 2 종합목록시스템 운영 사례



국립중앙도서관(KOLIS-NET) '국가자료종합목록'

<https://nl.go.kr/kolisnet/index.do>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1,800여 개 공공·전문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종합목록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공공도서관 종합목록'

www.library.kr/cyber/search/catalogSearch.do

경기도 내 26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경기도 도서관 종합목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http://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종합목록으로,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

자료 공유를 위한 상호대차 및 하나의 회원증 서비스

도서관의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간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상호대차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참여 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도서관과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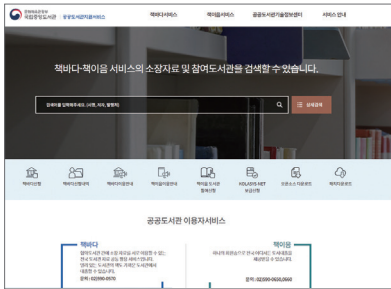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개발 도서관의 한정된 보유 장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서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 구입을 방지하고 자료 이용 극대화가 가능하다. 도서관이 종합목록을 구축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확인하고 요청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한편, 도서관은 회원 정보를 공유하여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 어디서든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회원 등록에 따른 사서의 부가적 업무를 경감시켜주며 도서관별 회원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어 카드 발급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그림 3 상호대차 및 통합 회원증 서비스 사례

책바다 · 책이음

<https://books.nl.go.kr>



책나라

<https://cn.nld.go.kr>



‘책바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국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이며, ‘책이음’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로 집까지 무료 배송하는 서비스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도서관의 정보 공유는 물리적 지식정보자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도서관은 국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목록의 공유뿐만 아니라 참고 봉사



같은 서비스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웹상의 이용자 질문에 신속·정확하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CDRS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있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 및 학술정보에 관한 질의답변을 받는 참고 서비스로, 사서가 도서관 소장 자료 및 온라인 지식정보자원 등을 활용하여 답변한다.

그림 4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출처: 국립중앙도서관(<https://nl.go.kr/NL/contents/N50203010000.do>)

도서관 협약을 통한 원문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영구 보존 및 개방과 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협약 도서관에 '국가지식자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로 국내외 도서관 및 자료실과 학술정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기관에 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1 FRIC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및 학문 분야명

지원센터명(분야명)		주요 학문 분야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약학, 생물학
경북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공학
경상국립대학교	환경·에너지	환경공학, 에너지, 원자력, 자원 공학
고려대학교	인문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역사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건축, 토목공학, 기계공학, 조선, 항공우주, 화학공학,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수학, 수리학, 물리학, 지구과학, 천문학, 화학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보건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예체능	교육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음악, 미술, 연극·영화, 무용, 체육
전북대학교	농·축산	농학, 축산학, 수의학, 식품학, 수산·해양학
충남대학교	행정·경영학·법학	정치·외교학, 법률, 행정, 경제·경영학, 무역학, 군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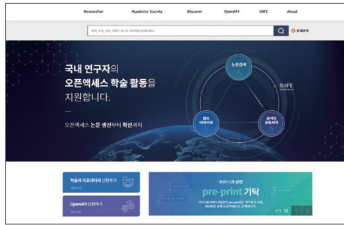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외국학술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정된 대학도서관은 약학, 교육학, 수의학 등 저마다 특정 분야를 전담하며 소속 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타 기관 소속의 학생 및 일반 연구자들을 위해 지원 분야 학술지에 대한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술 지식 공동 이용을 위한 오픈액세스의 확대

연구자들에게 학술출판물을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은 그간 매해 인상되는 해외 학술지 및 국내 상용 학술 DB의 전자 자료 구독료를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 왔다. 학술 저널 지식에 대한 접근 제약이 커지자 그 대안으로 2000년대 초, 모든 논문을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오픈액세스 운동이 등장했다. 오픈액세스는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누구든지 재정적·법적·기술적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학술논문 전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고, 복제·배포·인쇄·검색하도록 허용한다.

그림 5 오픈액세스 사례



KOAR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

<https://koar.kr>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 세계 오픈액세스 논문을 수집·제공



OAK 국가리포지터리

<http://oak.go.kr>

리포지터리 구축·보급사업을 통해 수집된 990만여 건의 콘텐츠를 통합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리포지터리

<https://dspace.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리포지터리로, 대학교 생산 연구물을 서비스

연구 성과를 독과점적 상업출판사의 이익으로 남기기보다 ‘학술 지식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도서관계 역시 오픈 액세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IFLA는 2003년 12월 오픈액세스 성명을 채택하였다.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오픈액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OAK 사업과 우리나라의 오픈액세스 거버넌스를 이끌고 있다.

지역 정보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적 가치를 가진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인 동시에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지역 고유문화를 수집·보존·진흥시켜야 하는 핵심 기관으로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역사, 향토, 문화자원을 아카이빙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6 지역 정보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사례

경기도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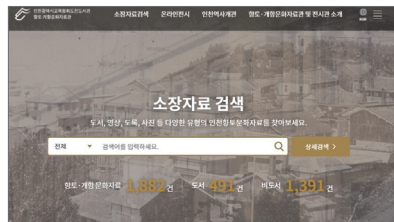
<https://memory.library.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지역 디지털아카이브로, 경기도의 지역, 문화, 행정, 역사 기록물 5만여 건을 서비스

화도진 향토·개항문화자료관

<https://history.ice.go.kr>



인천화도진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개항문화 자료관의 자료를 디지털화한 서비스



지식정보를 연계하여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 기관과 지식 기관들이 표준화를 통해 지식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손쉽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지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누구나 국가지식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⁵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그림 7 지식정보 연계 플랫폼

Science On

<https://scienceon.kisti.re.kr>



지식 공유

<https://share.nanet.g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 운영하는 과학 기술 지식 인프라로, 과학기술정보, 국가 R&D정보, 연구데이터 정보 분석 서비스 및 연구 인프라를 연계·융합한 서비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지식 공유 사이트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연구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 한곳에 모아 서비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 역량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가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지식정보법)이 2021년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의 통합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먼저 25개 국가 기관의 48개 사이트 4억 4천만 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큐레이션을 통한 정보 공유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자원을 날개의 아이템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지식정보자원을 서비스하는 방식도 변해야 한다. 서비스할 정보에 가치를 더해 선별하고 유통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지식정보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의 발견성’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이 일상이 된 정보 기술 환경에 걸맞도록 도서관은 인쇄 자료뿐만 아니라 전자책, 전자 저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지식정보자원을 활용하고, 이용자와 소통하며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8 큐레이션 서비스

DGIST C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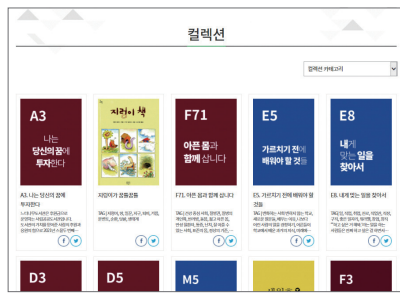
<https://curation.dgist.ac.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로, 전문가(큐레이터)가 선정한 콘텐츠로 운영

네티나무도서관 컬렉션

<http://www.netinamu.org/page/s1/s3.php>



용인 네티나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큐레이션 컬렉션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다루며 담당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가 참여하여 구성



도서관의 공유를 위협하는 장애물

정보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화된 정보 서비스의 도래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예산, 인력, 공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도서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시도에는 여러 장애 요인이 있다. 정보 기술을 통한 시도는 항상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정보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자원 공유를 위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저작권 문제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디지털화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범위를 도서관 건물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도서관이 가지는 공공성의 의미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디지털자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을 활용하려면 저작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는 개인정보⁶ 보호에 대한 문제다. 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남는다. 그리고 디지털 작업이 진행 중인 기록 자료들 속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느슨했

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던 시기에 의도치 않게 담긴 개인정보들이 산재하여 있다. 도서관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정보가 다른 목적에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은 적절한 정책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도서관 및 자료의 이용 기록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는 지적 자유의 실천을 제약하는 도서관의 자료 선정과 이용에 대한 외부 간섭 문제다. 종종 외부 단체와 기관들이 정치, 종교, 성별, 역사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도서 선정과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우수 도서를 선정하고 장서를 개발해야 하는 도서관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한다. 도서관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모든 지식과 지적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 검열은 사서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 즉, 누구나 기록된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을 억제하고 방해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2019년도에 개정된 「도서관인 윤리 선언」에서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라고 도서관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넷째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문해력 수준이다. 도서관이 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이용자들이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이 낮으면 서비스는 유용하지 않다. 도서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읽는 것, 또는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나 연령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없고 자신에게 유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도서관



의 정보 공유 활동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보 검색이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유니버설 디자인⁷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장서 개발 및 자료 조직 등과 관련한 사서의 전문성이다. 사서는 이용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정확하고 정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선별하고, 자료를 조직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사서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따른 역량을 개발하지 않고 아웃소싱 등을 통한 수동적인 서비스에만 익숙해진다면 이용자는 더 이상 '모든 형태의 정보를 수집·보존·서비스'하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능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한다. 사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정보를 생산하는 플랫폼이자 창작 기지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 도서관의 공유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안다. 그렇기에 현재의 지식 기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인터넷과 웹 환경의 정보 기술이 발달했고, 도처에 정보가 넘쳐난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먼저 도서관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제된 정보, 무료 접근, 새로운 지적 활동과 커뮤니티

7.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니티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 이는 도서관이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는 단순한 장소 그 이상으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개인화되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도서관은 여전히 사회의 영혼을 찾고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방향의 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모습은 무엇일까. 미래사회 도서관은 모든 유무형의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경제적 상황이나 기술을 다루는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용자들은 잘 정제되고 조직화된 정보들이 원활하게 연결되기를 바랄 것이다.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공간은 도서관의 기반이자 이용자와 디지털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지점이다. 여전히 도서관 활용 면에서 인쇄 자료 대출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를 구분하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가지는 기억을 축적하고 전승하는 기본 목적 속에서 함께 연계되고 설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 인프라이며 공공재다. 시민들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보를 선별·공유하여 제공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서관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시공간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결, 공유, 참여를 통해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다.



참고 문헌

- 권은경 (1997). 도서관 본질과 미래 도서관상(像). 도서관학논집, 27, 423-456.
- 송승섭 (2019). 한국 도서관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스프링어, 아나소피 & 튀르팡, 에티엔 (2021). 도서관 환상들(김이재 옮김). 서울: 만일.
- 윤희윤 (2019). 도서관지식문화사. 서울 : 동아시아.
- 이제환 (2019). 소수자의 정보 빈곤과 도서관의 책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1-31.
- 조한상 (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 책세상.
- 하승우 (2014). 공공성. 서울: 책세상.
- Gorman, M. (2010).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이제환 역). 서울 : 태일사.
- IFLA (2019). 모두를 위한 접근과 기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도서관 행동지침(한국도서관협회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Koontz, C. & Gubbin, B. 편 (2011). 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판,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오픈액세스

코로나19 시대의 오픈액세스 출판 실천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박서현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오픈사이언스 실천과 도서관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달에 힘입어 학술지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인쇄본을 도서관에서 구독하거나 복사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PDF와 같은 디지털 학술 출판물을 다운로드받는 문화가 생겨났다. 물론,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구독료를 납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술 출판물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액세스 운동은 학술지 시장을 장악한 거대 출판사가 학술지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일어났다.

오픈액세스는 과학 지식을 모두에게 개방하여 학술 협력을 증진하고 그 혜택을 시민이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운동



의 일환이었다. 오픈사이언스는 과학 지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 즉 인류 ‘공동의 부’로 보았다. 물론, 오픈사이언스의 이념이 과학 연구에서 지배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특허권이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과학 연구 성과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일정 부분 가로막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오픈사이언스, 오픈액세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전염병과 같이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결하는 데 과학 지식의 자유로운 활용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향후 오픈사이언스의 실천, 오픈액세스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식과 시민을 연결해온 도서관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오픈액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오픈액세스의 의미와 취지

오픈액세스는 과학 출판물·데이터·소프트웨어·소스코드·프로토콜 등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이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오픈사이언스의 요소 중 하나다.(UNESCO, 2020, 55-56) 오픈액세스 운동은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선언’[2002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이후 ‘2003년 베테스다 오픈액세스 선언’[2003 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Publishing](#)과 같은 해 ‘베를린 오픈액세스 선언’[2003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 and Humanities](#)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로 확

산됐다.¹

오픈액세스 운동의 시작을 알린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은 오픈액세스를 ‘모든 이용자가 동료 심사제 학술지 peer reviewed journal에 수록된 논문이나 아직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출판 전 논문 pre-print들을 경제적·법적·기술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검색해 읽고, 인쇄하거나 내려받고 색인 작업을 위해 링크를 거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무료 이용’이라고 정의한다. 또 오픈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보완 전략으로 ‘셀프아카이빙’과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권하고 있다.(Chan et al., 2002. 2. 14.) 전자가 ‘그린 오픈액세스 모델’ Green Open Access Model이고 후자가 ‘골드 오픈액세스 모델’ Gold Open Access Model이다. 이 두 가지 모델의 오픈액세스를 권장한 이유는 엘스비어 Elsevier와 스프링거 Springer, 톰슨 로이터 Thomson Reuters 같은 거대 출판사들이 학술지 시장을 장악하고 구독료를 올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에서 해당 출판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픈액세스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하는 연구자들의 운동이기도 하다.

부다페스트 선언을 필두로 한 일련의 오픈액세스 선언 이후 셀프아카이빙과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2009년에 이미 약 4,800여 종의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출판되었다.(Gurov, Goncharova, & Bubyakin, 2016, 89) 2016년에는 약 19%의 논문을 출판되는 즉시 오픈액세스로 읽어볼 수 있었고, 출판 1년 후 셀프아카이빙 등을 통해 읽어볼 수 있는 논문은 약 32%, 2년 안에 읽어볼 수 있는 논문은 38%였다.(Dodds, 2019, 348)

1.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2018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들의 오픈액세스 선언과 2019년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연대”의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오픈액세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원 외, 2018. 4. 20;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2019. 8. 29.)



그동안 오픈액세스는 점차 확대되어왔다. Plans S 등과 같이 오픈액세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시작된 Plans S는 2020년까지 참여 기구의 기금 지원을 받는 모든 학술 출판물을 오픈액세스 학술지나 오픈액세스 플랫폼에서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프랑스 국립연구센터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 웰컴 트러스트Welcome Trust, 게이츠재단Gates Foundation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Plans S를 거친 논문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출판 논문의 3.5%에 해당한다.(Dodds, 2019, 349) Plans S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픈액세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² 이는 학술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가 새로운 연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학술 지식에 대한 연구자와 시민의 자유로운 공유가 학술 지식이 내포하는 공동의 부의 성격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1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선언 10주년(2012)



출처: Wikimedia Commons(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b/10_years_Budapest_Open_Access_Initiative_-_logo.jpg)

2. 물론 Plan S가 비현실적이며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기관(스웨덴 인문사회과학재단(Swedish Foundation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도 있다.(Dodds, 2019, 349)

오픈액세스가 가진 난점

디지털 버전의 학술 출판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나의 사용이 다른 이의 사용분 감소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즉, 디지털 버전의 학술 출판물은 경제학적 의미로 ‘공공재’ public goods다.³ 물론 특허권이나 저작권, 지식재산권이 지식을 ‘상품’으로 보고 값을 매겨 ‘인위적 희소성’을 창출하지만, 지식이 본래 비배제적이고 비감소적인 공공재라는 사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⁴

그러나 오픈액세스를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학술지 출판 비용, 셀프아카이빙을 위한 디지털 리포지토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논문의 편집과 디자인에 드는 비용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저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업 모델화처럼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비용을 소속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지원받아 충당하는 것이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출판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자들은 오

3. 누군가가 PC나 도넛 같은 사유재를 구매한다면 타인은 더 이상 그것을 구매할 수 없다. 이러한 구매는 타인의 구매를 불가능하게 하며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총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구분된다.
4. 물론 이것이 특허권이나 저작권, 지식재산권이 모두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논문의 저자가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작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저작자가 창작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표 1 자원의 분류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경합 (감소)	사유재(private goods) PC, 도넛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 도서관, 공개시스템
비경합 (비감소)	회원재(club goods) 신문 구독, 놀이방, 탁아 시설	공공재 또는 공개재(public goods) 유익한 지식, 석양

출처: 오스트롬, 헤스(2010); 최현(2016)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글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연구자들이 오픈액세스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픈액세스의 취지를 살리고자 저자에게 출판 비용을 받지 않고 출판된 논문의 상업적 재사용도 금하는, 비상업적 기관이나 협회 등이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다이아몬드 오픈액세스 모델’¹⁾ *Diamond Open Access Model*을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Fuchs, Sandoval, 2013) 하지만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에 드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이아몬드 오픈액세스 실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상업화를 막으면서 지식을 개방하고 학술 협력을 증진하는 오픈액세스 문화를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이나 (셀프아카이빙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리포지터리의 운영·유지 비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이끄는 오픈액세스

사실 오픈액세스는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공성’을 가지는 학술 지식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예술 등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점에서 오픈액세스의 의미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연의 취지를 살려가는 오픈액세스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또 오픈액세스는 우선 학술지 시장을 장악한 대형 출판사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운동, 학술 운동이지만 단편적인 면만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이 생산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픈액세스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와 통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21세기 사회 운동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생산한 기존 지식에 기대어 다른 연구자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생산된다. 직접적인 공동 작업 이외에도 동료평가(peer review) 역시 새로운 지식 생산을 위한 연구자 공동체의 기여라는데 그 본령이 있다. 즉, 동료평가의 본령은 새로운 지식 생산을 위한 동료 연구자의 협력이라는 점에 있다. 이로써 우리는 지식이 연구자들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협력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오늘날 해외 거대 출판사나 학술 지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상용 DB 업체들이 지식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거대 출판사나 상용 DB 업체들은 지식의 유통을 통제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네티배 자본’(netarchical capital)(Bauwens, 2017. 9. 28.)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픈액세스 운동은 네티배 자본에 맞서 사회적 협력을 통해 연구자들이 생산된 지식을 연구자들의 공동의 것, 커먼즈로서 지키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커먼즈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형 출판사나 상용 DB 업체만이 네티배 자본인 것은 아니다. 플랫폼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시민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협력의 산물을 수탈하는 네티배 자본 혹은 네티배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나 우버(Uber)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시민 사이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생산된 부를 수탈해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장선상에서 오픈액세스를 네티배 자본의 수탈에 맞서는 21세기 사회 운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오픈액세스는 네티배 플랫폼에 맞서 시민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드는 운동과 연관이 있다. 두 운동 모두 더 자유로운 사회적 협력을 추구하고, 시민·연구자들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생산된 공동의 부, 커먼즈를 시민·연구자들이 되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시민·연구자 사이의 협



력이라는 점, 네티배 자본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시민·연구자 사이의 협력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상용 DB 업체가 연구자들의 협력에 기대는 동시에 협력을 지식 상품으로 만들어 통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연결을 통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오픈액세스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연구자들이 지식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이러한 회복은 연구자들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회적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후자의 면모는 오픈액세스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오픈사이언스의 본래 취지와 관련되어 있다. 오픈사이언스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로서 일반 시민이 학술 생산 및 지식의 민주화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UNESCO, 2020, 50) 시민이 학술 지식의 성과를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학술 생산과 지식의 민주화에 참여해 지식 생산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픈사이언스의 근본적 취지다.

코로나19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상호의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당신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 달려 있고 내가 쓴 마스크는 타인을 지키며 타인이 쓴 마스크가 나를 지킨다. 결국, 개인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과 주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실 마스크 또한 착용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무증상일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Helfrich, 2020. 7. 17.) 또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지구촌으로 확산되어 백신이 개발된 지금까지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인류 전체의 건강’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제기했으나 대응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백신의 유통과 접종에서 그 격차를 알 수 있다. 2021년 7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2억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 4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모두에게 백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나라마다 유통과 접종 속도가 다르다. 캐나다·영국·독일·미국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국민 비율이 50~70%나 되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저소득 지역 국가에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국민은 1.1%에 불과하다. 국가 간의 백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 공동 구매·분배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⁵ COVAX Facility가 가동되었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부국의 백신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김균미, 2021. 7. 22.)

인류 전체의 건강보다 자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 주요 제약 회사들이 백신을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바다. 이에 코로나19 백신을 ‘건강한 삶’이라는 전 인류의 기본권에 입각하여 인류의 ‘공동의 것’⁶ commons, 즉 커먼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Laval, 2020. 7. 15.) 이 주장의 핵심은 백신을 제약 회사들이 특허권을 갖고 전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인류가 권리를 가진 ‘전 지구적 공공재’⁷ global public goods⁵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고, 제약 회사들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유통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격차가 발생했

5. ‘공공재’(public goods)의 ‘공적’(public) 성격은 국가와 관련된 것, 국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푸블리쿰’(publicum)이 단순히 국가행정이 아닌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적인 것과 국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공중(public)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국가 서비스(state service)와 같은 것이 아니다. 결국 ‘전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는 전체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구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제공하는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것과 국가의 구분에 대해서는 웨인라이트(2014, 16); 백명경(2017, 113); Helfrich(2020. 7. 17.); Dardot, Laval(2020. 3. 28.) 참조.



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⁶

관련하여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소크Jonas Salk는 특허권 소유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소아마비 백신 특허권은 ‘사람들’이 소유한다”고 말했다.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백신이 생산·유통될 경우 수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고 예상한 것이

그림 2 조나스 소크의 모습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192372781@N03/51007240937/>)

다. 소크는 1950년대 말 백신에 대한 책임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위임했다.(Helfrich, 2020. 7. 17.) 이 일화는 현재를 돌아보게 하며 전염병으로 비롯된 인류의 위기를 소크가 실천했던 ‘오픈사이언스’로 타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픈사이언스의 필요

오픈사이언스는 과학 지식, 방법 등을 모두에게 개방함으로써 학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러 활동을 말한다. 오픈사이언스의 취지는 제도화된 학술 공동체를 넘어 시민이 그 이익을 누리는 데 있다.(UNESCO, 2020, 55) 이런 관점에서 거대 제약 회사가 백신 지식을 특허

6. 이러한 격차는 국가 간의 격차일 뿐 아니라 국가 내에 존재하는 격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17세 고교생이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초강대국 안에 존재하는 격차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가져오는 실업 등의 문제가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박상휘, 2021. 7. 16.)

권으로 소유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픈사이언스 취지와 배치된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세계보건기구의 주도하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정보 및 지식을 오픈사이언스 정신에 입각하여 개방했다면, 적어도 전 세계의 백신 격차가 지금보다는 줄어들었을 것 같다. 이러한 가정은 오픈사이언스와 대비되는 오늘날 지식 생산·유통의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

지식의 발달에 기여한 연구자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이는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 방안이 꼭 특허권이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자유로운 공유를 가로막는 형태여야 할까?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 혹은 사기업이 지식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지식 생산·유통 구조를 반영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오랜 관습에도 불구하고 오픈사이언스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학이나 기타 학술 지식은 연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데 활용·공유하는 기존 지식을 일종의 ‘공동의 부’라고 본다면, 새로운 지식은 공동의 부가 창작·변형·심화되는 과정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공동의 부와 무관한 학술 지식은 불가능하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그것의 문제나 한계를 지적하고,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연구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학술 지식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오픈사이언스는 이러한 학술 지식의 성격에 주목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인류 공동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기존의 의약학 지식(공동의 부)에 기초해 창안된 지식으로 본다면, 제약 회사들이 백신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공동의 부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에는 존속 기간이 있다. 존속 기간이 지나면 창



작물은 전체 인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부가 된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지식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공동의 부의 성격을 ‘회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존속 기간이 지난 뒤 지식에 공동의 부의 성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창안된 지식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의 존속 기간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함의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백신 공급이 불균형한 현재 시점에서 미국 내 특허권 효력을 중지시키고 세계 각국에서 복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 및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오픈사이언스 논의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전염병의 위기에서 인류의 건강과 제약 회사들의 이익을 두고 벌어진 논의가 오픈사이언스의 미래와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식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온라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을 평가하고 조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안하는 역량을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라고 한다. 시민이 이러한 역량을 발달시키지 않는다면 오픈사이언스가 추구하는 지식 생산에의 시민 참여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도서관은 ‘지식 기반시설’*knowledge infrastructure*(Borgman et al., 2015, 207-208)로서 지식과 시민을 연결시켜 그들의 역량을 발달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는 오픈사이언스의 실천에서도 도

7. 물론,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훨씬 강하다. 미 정부 역시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생산 증가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정민, 2021. 4. 28.)

서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함의한다.

오픈사이언스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위한 역량을 발달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UNESCO, 2020, 54), 그중 하나가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지식 기반 시설로서의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과 지식의 연결이 곧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시민 역량 발달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본래 시민이 스스로 교육하는 현상이었는데, 이러한 역할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

전염병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회에 비대면 접촉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각종 강의, 회의, 행사, 대회, 전시 등의 개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면 접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비대면 접촉의 이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접촉의 확대는 관련한 기술 발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비대면 학술지 출판회의와 학술대회 기획회의나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지방 거주 연구자들의 참여 증가는 학술 영역의 문화가 바뀌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드러낸다. 비대면 접촉의 확대는 비단 학술 영역만이 아니라 시민 사이의 연결성을 가시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물론 이 기회를 실제로 살리는 것은 디지털 문해력과 같은 시민 역량의 발달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전 세계에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시민의 디지털 문해력도 저마다 차이가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는 교육의 토대이자 지식 기반 시설인 도서관의 역할이다.

도서관은 본래 지식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구매할 저서



와 구독할 학술지에 대한 결정은 지식 생산을 위한 사회적 협력의 일부였고, 도서관은 이를 담당하여 지식 생산의 한 축을 맡아왔다.⁸ 언뜻 보기에 오픈액세스는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오픈액세스가 추구하는 지식의 자유로운 접근이 양질의 지식을 선별하여 구비하는 도서관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오픈액세스는 도서관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히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지식을 선별·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문해력 발달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픈액세스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선별·제공을 담당해온 도서관의 역할 또한 커진다.

사실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확대와 함께 동료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출판 비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초점을 맞춘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s)의 출판도 확대됐다. 연구비·임용·승진 등과 같은 간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 소득(impact income)을 얻으려는 연구자들의 필요가 약탈적 학술지 출판 확대의 배경이었다. 사이비 학술단체인 ‘와셋’(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WASET)이 출판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상당수의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약탈적 학술지의 폐해는 우리와 무관한 현상이 아니다.(허정원, 2018. 11. 11.)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는 지식일 수 없다. 오픈액세스의 확대와 함께 비 공공적 지식 생산 역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무엇이 참고할 만한 지식인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오픈액세스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지식 생산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오픈사이언스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공공성을 가지는 지식에 대한 시민

8. 대학도서관 제공 문헌의 활용 결과에 관해 20년간 이루어진 한 연구는 학과 교원들이 도서관 지원 자료에 많이 의존하여 연구할 경우 연구 성과가 뛰어났음을 보여줬다.(Eng, 2017, 217)

의 이해력과 활용력을 제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도서를 기획하고 출판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으로 196개의 도서관이 참여하여 21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인문학 열린 도서관’[Open Library of Humanities](#)을 들 수 있다.(Willinsky, 2018, 206) 인문학 열린 도서관의 사례는 도서관이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결국 오픈사이언스의 미래는 지식을 자유로이 활용하면서 지식 생산에 가까이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과 함께 공공성을 가지는 오픈액세스 출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서관의 기여·역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낳은 역설적 가능성

비대면 접촉을 양산한 코로나19는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시민의 사회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오픈액세스의 과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과학 지식을 모두에게 개방하여 인류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오픈사이언스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오픈사이언스의 주요 요소인 오픈액세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식 공유의 확대가 오픈사이언스의 본래 취지인 시민의 지식 생산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운동과 오픈사이언스의 실천은 시민의 지지와 참여가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식과 시민을 연결해온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코로나19가 오픈액세스 운동과 오픈사이언스의 실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다. 이는 시민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지하고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끌어 내는 그 지점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고정민 (2021. 4. 28.). 코로나19 백신 공급 불균형에 특허권 풀릴까. 청년 의사.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092>
- 김균미 (2021. 7. 22.). 글로벌 백신 양극화 해소법, 코백스 ‘절반의 성공’에서 배운다. 서울신문.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3027004>
- 박상휘 (2021. 7. 16.). 코로나발 진짜 재앙 ‘富 쏠림’...전세계 ‘분노의 폭동’ 끊어오른다. 뉴스1.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373284>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1), 111-143.
-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2019. 8. 29.).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연대 선언.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s://knowledgecommoning.org/>
- 오스트롬, 엘리너 & 헤스, 샬럿 엮음 (2010). 지식의 공유 (김민주, 송희령 옮김). 서울: 타임박스.
- 웨인라이트, 힐러리 (2014). 국가를 되찾자 (김현우 옮김). 서울: 이매진
- 최현 (2016).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땅, 물, 바람. 과천: 진인진, 23-40.
-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외 (2018. 4. 20.).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 오픈 액세스 출판 선언.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kla.kr/jsp/info/association.do?procType=view&f_board_seq=55109
- 허정원 (2018. 11. 11.). 혈세로 관광지 가짜 학회...출연 박사 249명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인용일: 2021. 8. 9.].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14723#home>



- Bauwens, M. (2017. 9. 28.). 커먼즈의 역사와 진화. 커먼즈번역네트워크.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commonstrans.net/?p=895>
- Dardot, P. & Laval, C. (2020. 3. 28.). 정치적 시험으로서의 팬데믹: 전지구적 커먼즈를 주장하며. 커먼즈번역네트워크. [인용일: 2021. 7. 16.]. 출처: <http://commonstrans.net/?p=2264>
- Helfrich, S. (2020. 7. 17.).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시장과 국가를 넘어 생각하게 하는가?. 커먼즈번역네트워크.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commonstrans.net/?p=2222>
- Laval, C. (2020. 7. 15.). 인간의 연대와 전지구적 보편 커먼즈. 커먼즈번역네트워크. [인용일: 2021. 7. 26.]. 출처: <http://commonstrans.net/?p=2290>
- UNESCO (2020). First Draft of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신은정, 이다은 지음.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를 향하여: 오픈 사이언스 권고 마련의 배경과 경과, 향후 전망.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47-85.
- Borgman, C.L., Darch, P., Sands, A.E., Pasquetto, I.V., Golshan, M.S., Wallis, J.C., & Traweek, S. (2015). Knowledge infrastructures in science: Data, diversity, and digital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Libraries*, 16, 207-227.
- Chan, L., Cuplinskas, D., Eisen, M., Friend, F., Genova, Y., Guédon, J-C., Hageman, M., Harnad, S., Johnson, R., Kupryte, R., La Manna, M., Rév, I., Segbert, M., de Souza, S., Suber, P., & Velterep, J. (2002. 2. 14.). Read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Retrieved July 26, 2021, from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 Dodds, F. (2019). The future of academic publishing: Revolution or evolution revisited. *Learned Publishing*, 32, 345-354.

- Eng, S. (2017). The library profession in the time of open access. *The Serials Librarian*, 73(3-4), 215-225.
- Fuchs, C. & Sandoval, M. (2013). The diamond model of open access publishing: Why policy makers, scholars, universities, libraries, labour union and publishing world need to take non-commercial, non-profit open access serious. *Triple C*, 13(2), 428-443.
- Gurov, A.N., Goncharova, Yu.G., & Bubyakin, G.B. (2016). Open access to scientific knowledge: Its state, problems,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rocessing*, 43(2), 88-94.
- Willinsky, J. (2018). The academic library in the face of cooperative and commercial paths to open access. *Library Trends*, 67(2), 196-213.





공공자원

공공자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서비스

김영미 ·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디지털 기술과 사회 변화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사업 확장과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까지 달성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한 경제 발전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지능정보 신기술의 발달은 플랫폼 영향력의 급증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비중 또한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2019)¹도 향후 10년간 신규로 창출될 가치의 60~70%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리라 예측하였다.

1. <https://www.weforum.org/>



플랫폼의 부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부분이 데이터 경제다. 데이터의 역할이 단순한 비즈니스 기능 지원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고객 간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전환되고 그 자체로 상품이 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2017)은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달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촉매 역할을 하는 시대의 경제라는 의미로 데이터 경제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극복과 새로운 성장 기회의 발판을 디지털과 데이터에서 찾고 있다.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배, 전달의 단계별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2021. 4.)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더불어 추진되어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2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미국과 영국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을 빠르게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범위가 전문가와 기업은 물론, 정부 관계자 및 학생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 *data repository*의 역할에서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용자 중심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은 시민 참여 유도과 더불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선하고 창안하는데도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점데이터는 그 제공 기관의 수와 제공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데이

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야 한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경제 기반의 변화와 지능정보 기술의 진화는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의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주요 함의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 정보 기술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기술

지능정보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핵심 기술로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들고 있다.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대량 생산과 데이터를 생성하고 연결하는 사물 간 통신의 활성화는 사물인터넷 개념의 정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보관, 관리, 분산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알고리즘과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계기로 새로운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²

끊임없이 진화하는 IT 신기술과 역동적인 시장의 요구에 힘입어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이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낡은 시스템으로 밀리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고객 관점을 최적화하기 위한 대민 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즉각적인

2. 성옥준 (2017). 지능정보시대의 공공 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22.



대응 또한 점차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 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하는 데이터, 정보, 지식의 독자적 관리와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의 한계를 기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³ 즉, 다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 공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간 영역의 서비스는 융복합 방식을 접목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관점에서 유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진다. 공공 분야도 제공하고 있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융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민간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정보⁴와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도 정보와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로 개방하고 누구나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돈 탭스콧 Don Tapscott(1996)⁵에 의해 처음 소개된 디지털 경제 개념은 최근 인터넷뿐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성⁶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경쟁력의 원천을 데이터로 보고, 데이터 기반의 작동 기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가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과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⁷ 특히 지능정보사회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3. 김경섭 (2010). 행정정보 공유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26.

4. 예를 들면 공공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 주민정보, 위치정보, 교통정보 등이 해당한다.

5. Tapscott, D. (1996). The Digital Economy: 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6.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12.). 균형발전모니터링 이슈 Brief. 제6호. 국토연구원, 17-27.

공공자원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이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한다.

공공자원의 개방과 공유는 공공 서비스의 확장성을 도모하며, 정부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 사례 및 현황을 통해 볼 수 있다.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보유한 각종 편의시설(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국민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자원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이 단기간에 비영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공유누리 포털사이트

<https://www.eshare.go.kr>





대표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유누리는 공공 부문(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중 유희시간이 발생하는 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다. 이들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시설과 공간,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검색하여 예약과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포털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공공자원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필요 시 예약을 통해 활용할 수도 있다.

공유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한 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등 국민의 일상 편의와 관련 있는 서비스는 물론, 전국 캠핑장 정보, 도시공원 정보, 유명 둘레길 위치, 선택 지역 지도 기반 정보 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방역 물품 대여 서비스, 전국의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주변의 무료 주차장 정보 등도 제공하는 등 주민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플랫폼과 공유누리 서비스를 연계해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공개방자원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확장성 제고 차원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유누리에서는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공유의 가치를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2017년 가을, 아마존Amazon의 음성지원 기기인 알렉사Alexa가 출시와 동시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주었다. 당시 아마존의 부사장이었던 라부친 Steve Rabuchin은 “음성 및 인공지능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됐지만, 진정한 기술적 성장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클라우드, 머신러닝 및 딥러닝과 같은 무한한 컴퓨팅을 함께 구현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업체에서도 연계 상품을 개발하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 8월 창립된 숙박 공유플랫폼 스타트업으로,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190개 이상의 국가와 3만 4천 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다. 미국의 중년 여성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의 남은 방을 공유하고 용돈도 벌지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거실로 불러 모아 수다를 떨며 이해의 공감대를 높이는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이면의 기대감도 관심을 끌었다(물론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유 개념의 새로운 보완이 요구되었다).

이용도가 높고 인기 품목 중 하나인 우버(Uber)는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운전기사 없는 운송 서비스 개념으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준다. 승객의 스마트폰에 깔린 우버 앱을 통해 요금이 자동 결제되며 이 중 20% 내외의 범위에서 우버가 수수료를 가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되는 구조다. 이때 요금은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평일 낮 시간대에는 가격이 내려간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팁을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계산하는 일은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우버는 이러한 불필요한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Travis C. Kalanick)은 P2P(Peer-to-Peer) 파일공유시스템⁹을 우버와 연결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모바일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 있을까’로 시작된 캘러

8.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 breakfast)는 조 게비아(Joe Gebbia)와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 네이션 블레차르치크(Nathan Blecharczyk)가 집 안에서 잘 쓰지 않는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손님에게 에어베드(air bed)와 아침(breakfast)을 내준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었다.

9. P2P(Peer-to-Peer) 기술은 고성능 중앙서버나 광대역 네트워크 없이도 상호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네이버 백과사전)



닉의 아이디어는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연계되어 대중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공유경제’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공유경제는, 분산형 컴퓨팅, 카풀 등의 공유 행위가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만이 아닌 범사회적으로 실천되어 왔다고 본다. 공유경제는 가격 체계보다는 사회관계와 공유의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데 주목한다.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부상한 범사회적 공유는 단순히 휴머니즘 기반의 공유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인 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공유 경제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본질적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기존 경제 질서에 대한 파괴와 우려, 산재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다수 스타트업의 특징은 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역할도 지식 전수가 아닌 지식을 생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간 경쟁보다는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미래 세계를 준비하고 창업과 창직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청년들의 30년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교육 체제로의 변화도 도전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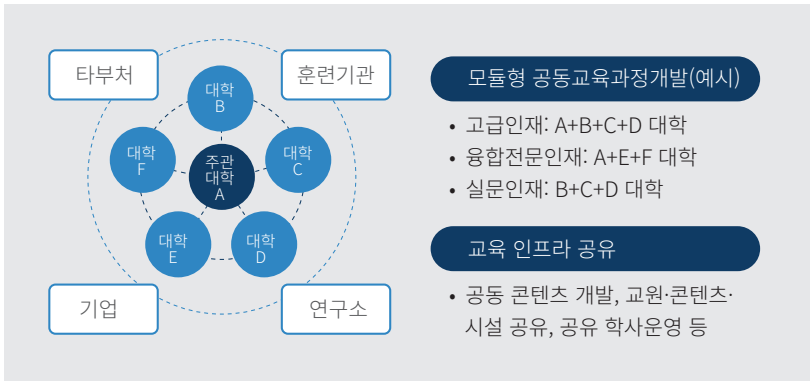
최근 교육부에서는 ‘혁신공유대학’을 발표하였다. 혁신공유대학은 복수의 대학이 모여 하나의 기술을 중심으로 일종의 ‘가상대학’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들과 수도권 대학의 학과별 강점을 한데 모아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여 실행 중이다.¹⁰ 참여 대학들은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10. 교육부 (2021. 2. 24).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

공공자원

운영, 교육 품질을 관리, 첨단 교육 과정을 적용하며 이는 학위로 이어진다. 학위는 여러 전공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누적하여 ‘미니학위(인증서)’를 주는 ‘마이크로 디그리’¹¹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공유대학의 핵심은 무엇보다 대학 간 학사제도를 개방해 타 대학의 교과목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공동교육 과정 중 온라인 강좌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비참여 대학 학생은 물론 일반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림 2 혁신공유대학



출처: 교육부(2021)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지능 정보 기술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투입되는 ‘AI 에브리웨어’^{AI everywhere}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

11.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는 학점당 학위제로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 학위와 별개로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로 통용되고 있다.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인공지능 스피커, 각종 가전제품부터 기업의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언택트 시대 선제 대응’ 차원의 생활밀착형 협동 로봇 도입 등 기존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선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트윈(가상 속 쌍둥이)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물리적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트윈은,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Tony Stark)가 3D 홀로그램을 이용해 아이언맨 슈트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슈트를 미리 만들어보는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로 현실과 동일한 모형을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3D 지도, 정밀 도로 지도, 주요 산업 시설 관리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로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에 포함되고 있다. 공공인프라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시장이 확대된다면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와 활용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의 수집을 원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일부 ICT 기업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 관련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데이터 기반의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차곡차곡 쌓이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투자한다.

더욱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선두 ICT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API를 과감하게 개방하여 더욱 많은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더 많은 데이터가 자연 생성되도록 하는 플랫폼 중심의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목한다. 데이터의 생성이 갖춰져야 품질도 높일 수 있고 비즈니스의 판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데이터를 확보하는 길은 기업에 있어 중요한 원천 자원이 된다. 당장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사업 확장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기업의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지 알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데이터가 가지는 비중은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인식하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위해 ‘데이터댐’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를 수행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데이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의 공공데이터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각 부처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데이터의 요리는 주요 재료에 해당하고, 자원의 원유에 해당할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 영역의 데이터는 물론, 일상 영역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모일 때 그 축적의 힘은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¹²

데이터의 자산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12. 김영미 (2021). AI와 데이터,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다. 지역정보화, (126), 74-79.



하고 생태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미래 사회의 경쟁력으로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혁신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데이터 공유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특히, 공적 마스크 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위치 정보, 교통 정보 등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보의 활용과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고객만족도 제고 및 다양한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이다. 신용 정보, 금융 정보, 위치 정보 등도 포함하여 안전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3법’¹³이 통과되면서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 및 방안을 되짚어볼 단계이다. 데이터의 실질적인 수입, 관리, 공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단계별로 세분화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문 조직은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지속해서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프라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적인 IT 강국이라 평가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 분야도 지속적인 개방과 활용을 토대로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강국으로 평가 받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개 분야가 우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및 소셜 데이터까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부에서 생산하고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발달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13.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는 연계되어 활용될 때 의의가 있으며,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지능형 데이터로 가공돼 확장성을 높일 때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정책과 법·제도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 행정과 공공 서비스를 연계하여 확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법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진척시키기 위한 주요 법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들이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된 이후 총 4회 개정되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교통, 기상, 공간,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스마트산업의 핵심 자원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민간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정부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법」은 크게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과 공공데이터 등록이나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반에 대한 내용(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 기반 조성),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분쟁 해결(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등)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과학 행정 추진 및 공공 서비스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1년 현재 총 15번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2월 4일에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개정(일명 개망신법)되면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간에서 수집 및 활용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수집 및 활용하는 개인정보까지 모두 적용되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행정 추진 및 공공 서비스에 활용되는 공공데이터라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조항은 최근 신설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로, 제28호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부터 28조의 7(적용 범위)까지 규정되어 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나 가명정보끼리 결합할 수 있는 요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및 가명정보의 처리가 금지되는 조건과 이러한 금지 의무를 어겼을 경우의 과징금 조항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였고, 이를 완화하여 데이터 시장의 확

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 의견 수렴 및 반영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199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 정보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로서, 제정 당시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 1 개인정보의 범위 비교

개념	활용 범위	예시
개인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홍길동 990909-1234567 010-1234-5678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abcd@email.com 통신요금 8만2천 원 기관지염
가명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	홍-- 99년생, 남자 010..... 서울종로구 ...@email.com 통신요금 8만2천 원 기관지염
익명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20대 남자 서울 통신요금 8만 원대 기관지염

출처: 성욱준(2013)¹⁴

이후 2008년에 정부의 정보화 관련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

14. 성욱준 (2013).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12-837. 자료를 중심으로 재정리.



년 6월에는 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률로서, 인공지능 기반 과학행정 추진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본법률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은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법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공공데이터법」이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데이터에 대한 공개를 명하고 있다면,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포함한 각종 행정업무를 결정하도록 명하는 법입니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과학행정 및 각종 공공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인 해당 법률의 목적이나 정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는 총칙이나 벌칙 등에 대한 내용 외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 체계(제2장 추진체계),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기반인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인 각종 플랫폼이나 분석센터 등을 구축(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

즉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 지원에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행정 추진 및 공공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조항은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행정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적용 범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공공 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여줄 증거 기반 및 정책 기반의 강화가 예상되며, 무엇보다 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인사체계의 확립,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

비대면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의의도 있지만, 이면에 담긴 부정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역기능을 대비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디지털이 가져오는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가 강점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숨겨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 사전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가운데, 법과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윤리의식 확산을 우선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사회적 포용의 확대, 디지털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윤리체계가 구축되어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윤리 거버넌스의 작동이 요구된다.



공공 서비스의 진화

비대면사회의 진입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펼쳐진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사회현상) 상황은 생활의 변화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재택근무,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개편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재편을 가지고 왔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생활 자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합성 신조어인 비대면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대면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다 보니, 비대면의 보편화는 가장 큰 변화이자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188여 개국의 15억 8천여만 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받고 있다. 그동안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B러닝)이나 거꾸로 교실이라 불리던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중심 교육(Project-Based Learning: PBL 등 교육 방식의 변화를 강요에 가깝게 강조했음에도 확산 효과가 빠르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합하는 블렌디드러닝과 플립드러닝 등이 혁신모델로 부각되었고 캠퍼스 없는 미네르바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등장하였다.

의료계도 대변혁이 기다리고 있다.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실행이 어려웠던 원격진료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고도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시행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들 또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는데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채용도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여 필기시험을 치르고 인

공지능 면접 및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찌감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키오스크(무인자동화 단말기)를 활용한 주문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그 확장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가 유사한 미래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가라앉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세계 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산업 분야가 급격히 재편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전통 제조업과 대면 서비스업 등은 위축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강조한다.

비대면 환경 적응하기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속화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활문화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용이한 세대는 비대면 서비스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아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한 장년 세대, 장애인 등의 사람들은 비대면 시스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비대면 디바이드’^{untact divide}: 비대면 양극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원격교육 과정에서도 상대적 교육 약자가 발생하고, 비대면 원격수업의 실효성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온라인 강의로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인관계 모습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인편의점에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온라인 메신저로 동료와 대화하고 업무를 진행하며 점심에는 키오스크로 주



문해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마신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재료로 저녁을 해 먹고, 웹툰을 보거나 홈트레이닝을 하며 새벽 배송 서비스를 주문하고 일과를 마치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비대면 문화의 가속은 주문배달·배송업종의 고속성장 현상을 통해 확인되었고, 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디지털 상점과 배달 시장의 확장성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강화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이동이 이뤄지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소비 시장의 규모와 성장세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소비 영향력의 증가는 마케팅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SNS, 홈쇼핑 시장 등 맞춤형 방식의 새로운 마켓이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집을 근거지로 일상생활과 일이 순환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홈트레이닝 등의 시장도 연계하여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산업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는 에듀테크와 재택근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택근무 역시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으로 협업 도구, 화상 회의 등 글로벌 협업을 위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시장의 확장을 불러올 것이다. 나아가 비대면 산업의 확산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의 침해나 해킹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보안 관련 산업이 함께 강조되고 관련 시장의 기능도 활성화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¹⁵

15. 김명미 (2020).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 미래성장 그리고 디지털 뉴딜. 지역정보화, (123), 56-61. 내용을 재정리함.

경계를 넘어서는 맞춤형 서비스의 진화

공공 서비스는 고객의 니즈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발행할 수 있다. 또 디지털 전환으로 공공 서비스의 전달 체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기술 생태계를 반영한 수요자 시각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법 중심의 행정에서 서비스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나아가 개인별, 특화된 개성, 다양성에 주목하여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을 지향하는 공공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두드러진다.

최근 경상남도는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행정 서비스 혁신을 선포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 서비스 업무 환경과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을 전담하는 실험형 벤처조직인 경남 G-랩(Government-Laboratory)의 도입 방안도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플랫폼 모델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투표를 통해 일정 부분 동의를 얻은 아이디어를 시정 과제로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고차원의 인공지능 데이터 서비스 발굴과 지원 등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 공공재의 시민 자산화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ICT 기술을 공공 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고 ICT 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범 구축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는 이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관 기관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산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올해 추진되는 14개 과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 주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의 개방 및 민간 서비스·플랫폼 활용 진척에 중점을 두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분증, 전자증명서의 확대, 스마트업무 환경 개선 등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법을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확산 효과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인프라 확보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및 민간 시장, 지역별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도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가 공공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형 데이터 구축, 데이터 포털 마련,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등 새로운 접근법이 제안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⁶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 경로 추적, 데이터 공유 등 팬데믹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그동안 구축한 ICT 인프라와 경험이 나름 진가를 발휘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와 시행하기 어려웠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쩔 수 없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디지털에 더 밀착되어야 함을 인지하였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 김영미 (2020). 지능 정보 기술과 서비스혁신. 지역정보화, (120), 58-61.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함.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부는 민간이 설계하고 주도한다는 점도 더 이상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유를 통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틈새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나는 일상의 변화가 우리 곁에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21. 2. 24).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 12.). 균형발전모니터링 이슈 Brief. 제6호. 국토연구원, 17-27.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구현(안), 1-27.
- 김경섭 (2010). 행정정보 공유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한국행정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1-26.
- 김영미 (2020).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 미래성장 그리고 디지털 뉴딜. 지역정보화, (123), 56-61.
- 김영미 (2020). 지능 정보 기술과 서비스 혁신. 지역정보화, (120), 58-61.
- 김영미 (2021). AI와 데이터,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다. 지역정보화, (126), 74-79.
- 성옥준 (2013).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12-837.
- 성옥준 (2017). 지능 정보 시대의 공공 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22.
- Tapscott, D. (1996). The Digital Economy: 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법·제도

오픈엑세스를 통한 지식의 공유와 저작권*

안효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적 논의의 대상으로서의 오픈엑세스

서구에서는 학술지의 상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지 오래다. 학술지나 학술 DB의 구독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찍이 서양에서는 공개 접근을 통한 지식의 확산과 이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학술논문에 대한 공개 접근, 즉 오픈엑세스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국내 학술지나 학술 DB의 구독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오픈엑세스에 대한 국내의 논쟁 또한 뜨겁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학술지가 비영리단체인 학회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고, 그 상업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 이 글은 필자의 “오픈엑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계간 저작권, 2010 겨울호, 24쪽 이하)과 “국내 문정보학 분야 오픈엑세스 선언의 의미”(국회도서관, Vol.461(2018. 8.), 12쪽 이하)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도 외국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까지 한다. 반면, 현실적으로 외국 저명학술지를 구독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도 오픈엑세스 원칙의 필요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자발적인 합의 또는 출판사의 묵인하에 오픈엑세스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으나 지식공유의 결정권을 출판사 또는 저작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 연구결과물이 공적 재원이나 대학의 지원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자발적 공개open가 아닌, 법률에 따른 공개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지식공유를 위한 오픈엑세스 운동의 역사와 취지, 특히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계약상 오픈엑세스의 실현, 오픈엑세스를 위한 저작권법의 대응에 대하여 이를 활발히 전개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오픈엑세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픈엑세스 운동의 배경과 전개

오픈엑세스 운동의 배경

오픈엑세스 운동은 2002년 2월 부다페스트Budapest 선언, 2003년 6월 베틀스다Bethesda 선언, 2003년 10월 베를린Berlin 선언 등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오픈엑세스 운동은 “저작물의 가시성visibility, 독자층, 그리고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최대의 보상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산출output 단계의 구독료기반 모델이 아닌 투입input 단계의 저자 지불 모델을 적용함

으로써 도서관과 개별 구독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¹

1) 학술지 가격의 상승과 지식 보급 메커니즘의 실패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지속해서 발굴해야 하며, 그 지식을 토대로 다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를 되도록 널리 학문공동체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새로운 지식의 창작자로서 학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매체를 통해 학문공동체나 일반 대중에게 공표하는 자로서 출판사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표된 모든 지식을 다시 수집·보존 및 전달하는 자로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상적인 학문 발전의 과정은 출판사가 적절한 가격으로 양질의 학술서적이거나 기타 간행물을 도서관에 제공하고, 도서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간행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특히 서구에서 학술지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도서관의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도서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오픈액세스 운동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원하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학술연구의 공표는 대부분 인쇄된 학술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학자들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공표하길 원한다. 학술지는 단지 연구 결과를 공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자에게 일종의 명예를 가져다주고,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면, 그 학술지의 명성, 해당 논문의 피인용지수 등

1. 최재황, 조현양 (2005). 오픈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대응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2(3), 308쪽.



에 의하여 학자의 업적이 평가된다. 이는 대학에 소속된 교수에게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및 의학^{Medicine} 분야²에서 두드러지나 다른 학문 분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젊은 학자들은 출판사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출판사에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다시 그 연구결과물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³

2) 저작물창작의 기여도와 이익귀속의 모순

학술논문이 창작되어 학술지에 게재되고 그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학문 발전을 위한 창작의 기여도와 이익 귀속의 측면에서 본다면, 출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나 출판사의 독점권을 쉽게 정당화할 수 없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논문 발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저자인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과 연구설비 기타 인프라는 교내외의 공공적 성질을 띤 재원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다. 논문의 심사에 대해서도 그 심사위원은 무상으로 해주거나 상징적으로 매우 적은 사례를 받을 뿐이다. 출판사가 하는 일이란 고작 논문을 편집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즉, 학문 발전을 위한 창작의 기여도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저작자인 교수가 가장 크게 기여하고, 그다음으로 교수의 연구 활동 또는 그의 소속 대학을 지원한 국가 또는 기타 사회의 공적 재원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논문이나 해당 학술지의 판매로 인한 이익은 이와는 반대로 출판사에 거의 모두 귀속된다. 뿐만이 아니다. 학술지 구독자의 대부분은 다시 대학교 도서관이며, 그 대학도서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국가 등

2. 이것이 이른바 ‘STM’ 분야다.

3. Pflüger, T. & Ertmann, D. (2004). E-Publishing und Open Access – Konsequenzen für das Urheberrecht im Hochschulbereich. ZUM 2004, 436 f.

의 공적 재원이다. 요컨대 좀 비약해서 말한다면, 출판사는 공적 재원의 도움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판매하는 결과가 된다.

오픈액세스 운동의 전개

1) 유럽

과거의 오픈액세스 운동은 상업적 학술지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다. 상업적 학술지에 공표되기 전의 논문, 즉 인쇄 전 pre-print 버전을 저자 자신의 홈페이지나 기관 리포지터리에 게시함으로써 저자로서의 문명^{文名}을 떨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였다.

즉, 그린 오픈액세스 green open access⁴에 해당하는 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골드 오픈액세스 gold open access⁵ 학술지도 있었으나, 외관적 측면에서 레이어아웃 등 품질이 조악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투고논문에 대한 동료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학자들이 게재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린 오픈액세스도 전적으로 상업출판사의 자비로운 은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픈액세스 운동을 적극 확산시키고 있다. 네덜란드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엘스비어 Elsevier, 스프링거 Springer, 와일리 Wiley 등 유수의 출판사들과 오픈액세스 확산에 이바지할 것을 전제로 한 학술

4.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오픈 리포지터리에 저자가 셀프 아카이빙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영준 외 3인 (2016).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16.10, 29쪽)

5. 학술지에 별도의 논문처리비용(APC)을 지불하고 학술지 자체에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영준 외 3인 (2016).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16.10, 29쪽)



지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이른바 ‘청산계약’⁶ offset agreement을 체결하여 하이브리드 오픈엑세스 hybrid open access⁶ 출판을 위해 대학이 출판사에 지급하는 논문처리비용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약 1,000USD ~ 3,000USD 또는 그 이상)을 학술지 구독 비용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오픈엑세스를 위해 180여 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상업용 DB 구독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교수와 기타 학자들은 상업용 학술지의 편집인 활동을 중단하며 출판사들이 오픈엑세스 운동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제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도 강하게 오픈엑세스 운동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독일의회 인터넷과 디지털사회 조사위원회’⁷ Enquete-Kommission Internet und Digitale Gesellschaft des Deutschen Bundestages는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최초 공표 후 바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공표하였다. ‘스위스 학술연구촉진을 위한 국가기금’⁷ Schweizerische Nationalfonds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SNF, 오스트리아 ‘학술연구촉진기금’⁷ Fond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FWF도 오픈엑세스 공표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네덜란드 또한 마찬가지다.⁷

2) 국내

외국의 경우, 주로 상업 출판사에 의한 독과점적 학술지 유통의 폐해

6. 원래는 구독 학술지이지만 수록되는 논문 중에서 저자가 별도로 논문처리비용(APC)을 지불할 수 있는 오픈엑세스 옵션을 두고 있는 학술지를 의미한다.(남영준 외 3인 (2016). 글로벌 오픈엑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16.10, 29쪽)

7. Hartmann, T. (2017). Zwang zum Open Access-Publizieren? Der rechtliche Präzedenzfall ist schon da!. LIBREAS. Library Ideas, 32, S. 7 f. Available: <http://libreas.eu/ausgabe32/hartmann/>

와 상용 DB 구독 비용 상승을 우려한 학계 및 도서관계 등 민간 부문에서 오픈액세스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학술지를 평가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연구결과물의 공개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오픈액세스를 진행하였다. 2016년 KCI 등재지 1,890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술지 중 원문이 무료 DB에서만 제공되는 경우는 6%(115종)이며, 상용 DB와 무료 DB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는 42%(795종), 상용 DB에서만 제공되는 경우는 46%(873종), 기타 6%(107종)다.⁸ 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 48%는 누구든 원문에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상당 부분 오픈액세스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직 46%의 학술지가 DBpia, Kiss, eArticle 등 상용 DB만을 통하여 유통되고, 해당 DB를 대학도서관 등에서 구독하고 있다. 국내 학술 DB 가격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서관은 이마저도 비용을 지출하기 쉽지 않고 점차 가격이 상승하며 도서관의 재정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학술단체들도 오픈액세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예로 2018년 4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등 문헌정보학 분야 국내 학술단체들이 문헌정보학 분야 8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추진을 공동 선언하였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i) 발행 학술지의 단계적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ii) 타 학문 분야 학술단체에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권유, (iii)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이 연구 성과의 확산, 가시성^{可視性}과 인용률을 제고할 것을 확신, (iv) 오픈액세스 전환 후에도 학술지 질적 수준을 높게 유지, (v) 정부 및 학술진흥 공공기관의 오픈액세스 지원 요구 등이다. 국내 학자들이 주장하는 오픈액세스 전환의 주된 논거는 현재의 출판 방

8. 김규환, 정경희 (2017).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지를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3), 251쪽 이하; 정경희 (2018). 학술지 유통 현황과 이슈.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비블리아학회 2018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1쪽 이하 참조.



식은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커 지속 가능한 출판 모델이 아니라는 점, 국내 학술지의 온라인 유통을 담당하는 상용 DB의 구독료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에게 연구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용 DB에 구독료를 지급함으로써 이중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⁹

계약에 의한 오픈엑세스의 실현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후술하는 독일의 일부 주^州를 제외하고 오픈엑세스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없다. 계약에 의한 오픈엑세스는 주로 공적 재원을 통해 지원받는 연구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수혜자에게 연구 결과물을 학술지 출판 외에 기관 리포지토리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계약상 오픈엑세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계약 조건에 따른 제재가 수반되는데, 지원금의 반환 의무가 그 예다. 이하에서는 공적 부문에서 계약상 의무로써 오픈엑세스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유럽연합은 2011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호라이즌Horizon 2020’이라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 12월

9.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도서관의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비블리아학회 2018년도 춘계공 동학술대회 자료집.

법·제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칙(Regulation (EU) No 1291/2013)¹⁰으로 수립된 호라이즌 2020 계획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¹¹ 진행되었으며 7년 동안 약 800억 유로의 기금을 지원하는 초대형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이다.¹²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은 학술연구 결과의 출판물과 연구 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호라이즌 2020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 성과를 오픈액세스 저널이나 리포지터리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표준연구비계약Model Grant Agreement: MGA 제29.2조 참조), 오픈액세스 저널 투고 시 발생하는 논문투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연구 성과물의 공개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바로 ‘OpenAIRE’다.

그림 1 Horizon 2020 로고



출처: 한-EU연구센터(<https://bit.ly/3hrJB63>)

10.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OJ L 347/104, 20.12.2013.
11. 이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은 ‘Horizon Europe’이고, 이는 2021년 4월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칙으로 제정되어 같은 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그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다. Regulation (EU) 2021/6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April 2021 establishing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laying down its rules for participation and dissemin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290/2013 and (EU) No 1291/2013, OJ L 170/1, 12.5.2021.
12. 장훈 (2017).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300억 유로 투자계획(‘18~’20) 발표. 과학기술정책, 233, 8쪽 이하.



1) 연구 결과 출판에 대한 오픈엑세스

MGA 제29.2조는 동료심사를 받는 학술지에 공표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오픈엑세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비의 수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의 출판에 있어 이를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읽고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AMGA¹³ Annotated Model Grant Agreement: MGA의 주석본은 연구결과공표물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가능한 한 많은 권리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공중에게 연구결과공표물을 복제, 배포, 검색하고 이에 대해 링크를 설정하며 크롤링¹³ crawling하고 데이터마이닝¹³ data mining하는 것에 대한 권리 부여를 권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비 수혜자에게 가장 흔한 공표 형태인 동료심사 학술지 외에 연구보고서, 책, 세미나 자료¹³ conference proceedings 등 회색문헌¹³ grey literature에 의한 다른 형태의 공표에 대해서도 오픈엑세스를 권고하고 있다.

오픈엑세스 출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연구결과물을 리포지터리에 저장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른바 ‘그린로드’¹³ Green Road 방식인데, 이 경우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MGA 제29.2조는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또는 12개월(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출판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결과물 자체의 공표 외에도 Horizon 2020 계획 하에서 수행된 연구과제와 지원금에 대한 정보(예컨대 제목, 두문자약어¹³ acronym, 지원번호 등)를 기재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데이터도 공표되어야 한다.

13. 정보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것.

2) 연구 데이터의 오픈엑세스 정책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오픈엑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학술적 출판물에 대한 오픈엑세스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연구비 수혜자는 해당 데이터를 이른바 ‘FAIR data’ 형식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FAIR’란 검색할 수 있고(findable), 접근할 수 있고(accessible), 호환성이 있으며(interoperable), 재사용할 수 있음(re-usable)을 말한다. 이에 따라 Horizon 2020 계획에는 이른바 오픈연구데이터(Open Research Data: ORD) 파일럿이 시범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특정 분야에만 도입되었으나 2016년 7월 이후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예외적으로 ORD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MGA 제27조), 비밀유지 의무의 준수(MGA 제36조), 보안 유지의무의 준수(MGA 제37조), 개인정보의 보호(MGA 제39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오픈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오픈을 통해 해당 과제의 목표 달성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즉, 연구데이터 또한 오픈엑세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그 의무에서 제외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구결과출판물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가 ORD에 따른 오픈엑세스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관련된 메타데이터와 (MGA 제29.3조(a)(i)) 연구비 수혜자가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¹⁴에 기재한 다른 데이터들도 포함된다.

연구데이터의 오픈엑세스는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디지털 데이터를 데이터 리포지터리에 기탁한다. 둘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접근, 데이터마이닝, 이용, 복제, 유

14. 연구자료의 수집, 저장,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기재한 문서.



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해당 연구결과물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툴(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 프로토콜 등)과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오픈엑세스를 위한 비용 지원

구독형 학술지에 공표하던 연구결과물을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최종 소비자가 출판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되며 저자들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흔히 논문 처리 비용 또는 책 처리 비용(Book Processing Charges: BPC)이라고 불리는 오픈엑세스 출판 비용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많은 경우 이러한 비용은 대학교, 연구소 또는 각 연구지원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데, 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영국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 United Kingdom: RCUK), 오스트리아과학기금(Fonds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FWF) 등의 연구지원기관이 오픈엑세스 출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Horizon 2020 계획 하에서는 연구과제 진행 기간 중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픈엑세스 비용은 ‘직접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골드 오픈엑세스 출판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밖에 데이터 관리 또는 저장, 데이터관리계획(DMP)의 제작을 위한 비용(인건비 포함)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과제 신청 시 예산집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2016년 유럽연합 경쟁력이사회의 결의

2016년 5월 유럽연합 경쟁력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¹⁵는 Horizon

15. 유럽 내의 과학, 혁신, 무역,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28개 회원국의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이사회.

2020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픈액세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0년까지 학술연구의 출판에 대한 오픈액세스가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¹⁶ 이는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연구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공적 재원을 지원받은 연구의 출판에 대해서도 오픈액세스 정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¹⁷ 경쟁력 이사회는 또한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액세스 정책 실시를 강조한다. 즉,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 보안, 글로벌 경쟁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연구 데이터를 최적의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경쟁력이사회의 오픈액세스 결의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지원을 위한 여러 권고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만큼 유럽 연합 내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쟁력이사회의 오픈액세스 결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은 각국 대표들이 ‘즉각적인 오픈액세스’immediate open access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유예기간이 없거나 가능한 한 짧게 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비 오픈액세스non-open access 저널들은 통상 인쇄본 출판 후 6개월 또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경쟁력이사회에서 그런 오픈액세스나 골드 오픈액세스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즉각적인 오픈액세스’를 위해서는 출판 후 즉시 기관 리포지터리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16. Council conclusions on the transition towards an Open Science system, Brussels, 27 May 2016 (OR. en), No. doc.: 9526/16 RECH 208 TELECOM 100.

17. Id. at 7, para. 11.

18. Id. at 8, para. 14.



경쟁력이사회의 결의는 법률이 아니다. 그러나 28개¹⁹의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가 오픈엑세스를 위해 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이에 합의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8년 Plan S

2016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과학연구 분야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경쟁력이사회에서 유럽의 모든 학술적²⁰ 출판물scientific publications은 2020년까지 즉각적인 오픈엑세스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유럽 각국 주요 연구비지원기관들로 구성된 ‘과학유럽’Science Europe은 오픈엑세스를 가속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연구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²¹의 도움을 받아 유럽의 11개 국가의 연구비지원기관들이 ‘cOAlition S’라는 컨소시엄을 발족하였다. 이때 ‘완전하고 즉각적인’full and immediate 오픈엑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 ‘Plan S’다. ‘Plan S’는 각국의 연구비지원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의 출판물이 계약상 의무로 공개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19. 2016년 5월 당시에는 28개 회원국이었으나,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탈퇴로 현재는 27개 회원국이다.

20. 이는 인문학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1.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유럽연합 내의 과학 및 기술적 연구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관이다.

1) 2018년 발표 Plan S

‘Plan S’는 ‘과학유럽’²², 유럽 각국의 연구비지원기관의 책임자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치전략센터EPSC의 오픈액세스 선임고문인 로버트 얀 스미츠Robert-Jan Smits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것이다. ‘Plan S’에 대한 논의는 2018년 7월 프랑스의 툴루즈Toulouse에서 개최된 ‘유럽 과학 공개 포럼’Euroscience Open Forum: ESOF에서 시작되었으며,²³ 2018년 9월 4일에 ‘cOAlition S’라는 컨소시엄의 출범과 함께 공식 발표되었다.²⁴ 2018년 9월 출범 당시 ‘cOAlition S’에 가입한 기관은 유럽 내 11개 국가에 지나지 않았으나²⁵, 2021년 6월 1일 기준 총 27개의 국가 및 국제적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자선재단이 가입하고 있고, 그 지역적 범위도 유럽대륙을 떠나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었다.²⁶

위 계획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각국 또는 유럽연합의 연구회나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공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출판물은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오픈액세스 저널 또는 오픈액세스 플랫폼에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기본원칙 외 10개의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였고²⁷,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22. 2011년 10월에 결성된 것으로, 유럽 각국의 주요 연구비지원기관(RFOs)과 연구수행기관(RPOs)들로 구성된 협회다.

23. <<https://www.coalition-s.org/communication-on-plan-s/>>참조.(2021. 7. 25. 방문)

24. ‘cOAlition S’와 ‘Plan S’의 취지에 대해서는 Marc Schiltz, President of Science Europe, Science Without Publication Paywalls. a Preamble to: cOAlition S for the Realisation of Full and Immediate Open Access, 4 September 2018, <https://www.coalition-s.org/wp-content/uploads/cOAlitionS_Preamble.pdf>참조.(2021. 7. 25. 방문)

25. <https://www.leru.org/files/cOAlitionS_National_Funders.pdf> 참조.(2021. 7. 25. 방문)

26. <<https://www.coalition-s.org/organisations>>참조.(2021. 7. 25. 방문)

27. ‘Plan S’의 최초본문 <https://www.leru.org/files/Plan_S.pdf>참조.(2021. 7. 25. 방문)



2018년 11월 27일에 발표하였다.²⁸

2) 2019년 개정 Plan S

2018년 9월 발표된 ‘Plan S’(이하 ‘최초본’이라 함)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로부터 수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cOAlition S’는 이를 반영하여 2019년 5월 31일 ‘Plan S’의 원칙과 시행지침 개정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개정본은 “2021년부터는 각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인 연구회나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공적 또는 사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의 결과에 대한 모든 학술적 출판물은 오픈엑세스 저널이나 오픈엑세스 플랫폼에 공개되거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를 통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다.²⁹

‘Plan S’의 총체적인 목표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몇 가지 변경사항도 있었다. 우선, ‘Plan S’의 공식적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 이는 연구자, 연구기관, 출판사와 리포지터리 그리고 연구비지원기관이 그들의 정책을 변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해주기 위함이었다.³⁰ 또 특정 국가를 넘어 일정 지역 또는 국제적인 연구비지원기관은 물론, 민간 자선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적 연구보조금도 포함하여 ‘Plan S’ 가입 기관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Plan S’ 원칙에 부합하는 학술지 논문의 공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학술논문을 오픈엑세스 저널이나 플랫폼에 처음부터 공표하는 것이다. 둘째, 학술논문을 그린 오픈엑세스 저널로 출판하

28.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alition-s.org/wp-content/uploads/271118_cOAlitionS_Guidance.pdf>참조.(2021. 7. 25. 방문)

29. <<https://www.coalition-s.org/addendum-to-the-coalition-s-guidance-on-the-implementation-of-plan-s/principles-and-implementation/>>참조.(2021. 7. 25. 방문)

30. ‘Plan S’의 개정 취지는 <<https://www.coalition-s.org/rationale-for-the-revisions/>>참조.(2021. 7. 25. 방문)

지만, 동시에 저자승인원고(Author-Accepted Manuscript: AAM 또는 최종출판 버전(Version of Record: VoR)의 논문을 리포지터리에 기탁하는 것이다. 셋째, 학술 논문을 구독형 저널에 출판하지만 해당 논문에 한하여 오픈액세스로 공개 하는데(이른바 ‘하이브리드 오픈액세스’에 해당함), 이 경우 해당 저널은 ‘전환계약’(transformative agreements)에 따라 소정의 기한 내에 완전한 오픈액세스로 전환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 셋째 방식의 경우 ‘Plan S’는 2024년 까지만 이를 허용하고 지원한다. 어떠한 경우든 학술논문은 CC-BY 조건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그린 오픈액세스 저널과 하이브리드 오픈액세스 저널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인쇄출판 후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지원기관과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따라 저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한 누구든지 해당 논문을 원하는 매체에 원하는 형식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복제, 배포,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 Plan S 홈페이지

<https://www.coalition-s.org/>





저작권법상 권리에 의한 오픈엑세스의 실현

일부 국가에서는 오픈엑세스의 장려와 강제를 위한 법률적 측면의 접근도 하고 있다. 장려책은 저작자가 출판사에 학술지 출판을 위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차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책은 오픈엑세스를 위한 ‘계약상 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도입하여 저작자가 그 연구결과물을 반드시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독일

독일은 저작권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동시에 오픈엑세스와 관련하여 가장 진보적인 입법을 한 국가로 볼 수 있다. 독일은 2013년 10월 1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2014. 1. 1. 시행) 그린 오픈엑세스가 실현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당시 신설된 동법 제38조 제4항은 “최소한 절반 이상 공적인 재원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연구 활동의 범위 내에서 생성되고, 1년에 최소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학술적 논문의 경우, 그 저작자는 출판사에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최초 공표 후 12개월이 지나간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논문을 게재 확정된 원고의 버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공표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와 배치되는 취지의 저작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을 보면, (i) 최소

한 절반 이상 공적 지원³¹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 활동의 결과물 (ii) 학술지에 공표된 때로부터 12개월³² 경과 후 (iii) 비영리 목적 (iv) 게재 확정된 원고^{原稿}의 버전³³으로, 그 결과물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는 이른바 ‘제2차 공표권’을 저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저작자의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는 여전히 그의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저작자가 그의 연구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학술지 출판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오픈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오픈액세스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

오픈액세스 선두 국가인 네덜란드에서도 오픈액세스 활성화를 위해

-
31. 이는 별도의 연구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대학 내의 일반적인 연구활동과 연구과제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활동은 제외된다. 이와 같이 양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는 Sandberger, G. (2013). Zweitverwertungsrecht. ZUM 2013, 466, 470; Sandberger, G. (2017). Die Zukunft wissenschaftlichen Publizierens - Open Access und Wissenschaftsschranke : Anmerkungen zu den Kontroversen über die Weiterentwicklung des Urheberrechts. OdW 2017, 75, 78 참조.
 32. 이른바 STM 분야의 경우 12개월이 너무 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Sandberger, G. (2017). Die Zukunft wissenschaftlichen Publizierens - Open Access und Wissenschaftsschranke : Anmerkungen zu den Kontroversen über die Weiterentwicklung des Urheberrechts. OdW 2017, 75, 78 참조.
 33. 저작자는 출판사에서 1차 공표한 포맷, 즉 인쇄포맷으로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판사의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저작자는 아직 동료심사(peer review)와 같은 출판사의 심사를 마치지 않은, 즉 최초로 투고된 논문버전도 공개할 수 없다 (Fromm/Nordemann/Nordemann-Schiffel, 11. Aufl 2014, UrhG § 38 Rdnr. 15a)



2015년 6월 30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2015. 7. 1. 시행). 이 개정에 의해 신설된 제25fa조가 오픈엑세스 관련 규정이다. 제25fa조는 “네덜란드의 공적 기금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연구지원을 받아 작성된, 짧은 학술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간 후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그 저작물의 최초 공표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h조는 “저작자는 이 장^章의 규정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저작권법」의 신설 규정은 독일 「저작권법」 제38조 제4항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양자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의 적용 범위가 명백히 더 넓다. 신설 규정의 ‘짧은 학술저작물’이란 책 이외의 것으로, 학술지 논문이나 기념논문집의 각 기고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떤 한 책 중 여러 개의 장^章은 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독일법은 최소 50%의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 저작자에게 2차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법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기금에서 지원 받은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요건이 더욱 유연하고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과 시간제 계약^{part-time contract}을 체결한 자가 작성한 논문 또는 여러 저작자 중 소수의 자만이 공적 지원을 받은 대학교수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상 의무에 의한 오픈엑세스의 실현

오픈엑세스를 강제한 법률도 있다. 2014년 4월 1일 개정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고등교육법 제44조 제6항은 “대학교는 정관으로 그 소속학자들에게 그들의 직무 범위에서 발생하고 최소 매년 2

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편집물에 공표되는 학술적 논문이 최초로 공표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간 후 이를 비상업적으로 2차 공표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케 하여야 한다. 정관은 제1문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한다. 정관은 2차 공표는 이 법 제28조 제3항³⁴에 따른 리포지터리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5년 12월 10일 콘스탄츠대학교 *Universität Konstanz*는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 그 소속교수들에게 2차 공표 의무, 즉 오픈액세스 의무를 부과하였다.³⁵ 그러나 이에 대해 콘스탄츠대학교의 17명의 교수(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대 교수)가 콘스탄츠대학교를 상대로 위 규칙이 독일 헌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학문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³⁶ 또한 원고들은 위 정관의 근거가 된 법률인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고등교육법 제44조 제6항은 연방 법률인 「저작권법」과 독일 「헌법」 제71조(연방과 주³⁷의 입법권 관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이 입

34. “대학교는 그 소속 학자들이 이 법 제44조 제6항에 따른 2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거나, 리포지터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적절한 제3의 리포지터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35. *Satzung zur Ausübung des wissenschaftlichen Zweitveröffentlichungsrechts gemäß, § 38 Abs. 4 UrhG vom 10. Dezember 2015*. Retrieved July 25, 2021, from <https://www.uni-konstanz.de/universitaet/leitung-organisation-und-verwaltung/struktur-prozesse-und-rechtliches/satzungen-ordnungen-und-richtlinien/> (저작권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학술적 2차 공표권의 행사에 관한 2015년 12월 10일의 학교규칙)

36. 2차 공표의무(오픈액세스 의무)가 실질적으로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하며, 2차 공표의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저작권제한 원리인 이른바 ‘3단계 테스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Höpfner, C. & Amschwitz, D. (2019). *Die Zweitveröffentlichungspflicht im Spannungsfeld von Open-Access-Kultur und Urheberrecht*, NJW 2019, 2966 ff.; Sandberger, G. (2017). *Die Zukunft wissenschaftlichen Publizierens - Open Access und Wissenschaftsschranke : Anmerkungen zu den Kontroversen über die Weiterentwicklung des Urheberrechts*. OdW 2017, 75, 79 f. 참조



법관할에 관한 독일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³⁷ 그 무효 여부가 재판에 중요하므로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하였다.³⁸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 7월 현재까지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 심판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행정법원의 결정은 오픈엑세스의 강제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닌, 연방국인 독일의 연방과 주^州의 입법관할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다만, 오픈엑세스 의무는 학문 발전을 위한 일종의 저작권제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익이라는 미묘한 긴장관계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화에 난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만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청구의 내용적 측면, 즉 오픈엑세스 의무 부과가 학문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는 향후 오픈엑세스 운동의 방향 설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이다.

오픈엑세스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이제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오픈엑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오픈엑세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자, 대학 및 연구기관, 출판사, 연구지원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지식의 공유를 통한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더 나아가 인류의 삶에 닥치는 각종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37. VGH Baden-Württemberg, Beschluss vom 26.9.2017 - 9 S 2056/16, ZUM 2018, 211, 218 Tz. 77.

38. VGH Baden-Württemberg, a. a. O., S. 216 Tz. 60-61.

제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 리포지터리의 효과적 구축, 저자와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 수용 가능한 오픈액세스 유티기간의 설정, CCL과 같은 오픈라이선스(open license)의 적극적 활용, 출판비용의 지원 등 여러 제도의 변화와 실천도 수반되어야 한다. 오픈액세스 분야에서 선두국가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샌더 데커(Sander Dekker)가 2016년 5월 27일 유럽연합 경쟁력이사회 연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오픈액세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지금은 그 목표를 실행할 때가 되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학술논문의 저작자에게 오픈액세스 권리를 부여하였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수들에게 오픈액세스 의무까지 부과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픈액세스의 법적 의무화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오픈액세스의 강제보다는 장려가 바람직하다.³⁹ 연구 성과의 공유와 연구기관의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골드 오픈액세스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술단체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확산과 그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책 당국도 이를 위한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최초로 공표되는 연구결과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제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상업적 학술지의 보조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학술지의 경쟁 또는 대체 학술지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지난 6월 17일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의 공동주최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이 개최되었다. 여기서 정책 당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픈액세스 운동을 하여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학

39. 강제보다는 장려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로는 Löwisch, M. (2017). Förderung statt Zwang - Neue Open Access Strategie in Baden-Württemberg. OdW 2017, 59.



회 출판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해당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판 비용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오픈엑세스 의무를 부과하고 학술지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공적 재원이 투입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오픈엑세스를 (계약상)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상 의무는 차치하더라도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오픈엑세스를 위한 법적 권리로서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의 저작자에게는 이른바 ‘2차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규환, 정경희 (2017).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지를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3), 251.
- 남영준, 김규환, 신은자, 정경희 (2016).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9.
- 안효질 (2010).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계간 저작권, 2010 겨울호, 24.
- 안효질 (2018).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액세스 선언의 의미. 국회도서관, Vol. 461(2018.8.), 12.
- 장훈 (2017).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300억 유로 투자계획('18~'20) 발표. 과학기술정책, (233), 8.
- 정경희 (2018). 학술지 유통 현황과 이슈.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비블리아학회 2018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1.
- 최재황, 조현양 (2005). 오픈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대응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2(3), 308.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도서관의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비블리아학회 2018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Council conclusions on the transition towards an Open Science system, Brussels, 27 May 2016 (OR. en), No. doc.: 9526/16 RECH 208 TELECOM 100.
- Fromm, F.K. & Nordemann, W. (2014). Urheberrecht, 11. Aufl.
- Hartmann, T. (2017). Zwang zum Open Access-Publizieren? Der rechtliche Präzedenzfall ist schon da!. LIBREAS. Library Ideas, 32. Available: <http://libreas.eu/ausgabe32/hartmann/>



- Höpfner, C. & Amschewitz, D. (2019). Die Zweitveröffentlichungspflicht im Spannungsfeld von Open-Access-Kultur und Urheberrecht, NJW 2019, 2966.
- Löwisch, M. (2017). Förderung statt Zwang – Neue Open Access Strategie in Baden-Württemberg. OdW 2017, 59.
- Pflüger, T. & Ertmann, D. (2004). E-Publishing und Open Access – Konsequenzen für das Urheberrecht im Hochschulbereich. ZUM 2004, 436.
- ‘Plan S’ and ‘cOAlition S’. <https://www.coalition-s.org/>
- Satzung zur Ausübung des wissenschaftlichen Zweitveröffentlichungsrechts gemäß, § 38 Abs. 4 UrhG vom 10. Dezember 2015. Retrieved July 25, 2021, from <https://www.uni-konstanz.de/universitaet/leitung-organisation-und-verwaltung/struktur-prozesse-und-rechtliches/satzungen-ordnungen-und-richtlinien/>



공간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가치

임호균 ·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도서관 공간의 공공성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편집 기술 및 인쇄기의 발달, 전자 출판 및 웹 출판의 확대, 문서 및 이미지의 디지털화, 인터넷의 보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보의 양적 증가는 정보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공간적인 문제에 직면하였고, 그 대안으로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저장 공간의 압축을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정보의 디지털화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보다 훨씬 더 공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등의 새로운 매체를 탄생시켰다. 나아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 텍스트 미디어의 절대적 가치를 감소시키고 정보 전달 매체로서 기존의 비텍스트 미디어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며 미디어의 다



양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 즉 정보화 사회라는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 공공화의 필요성 및 요구 증대, 매체의 디지털화, 새로운 매체인 멀티미디어의 등장 및 정보 전달 매체의 다양화는 정보의 저장과 접근, 소통에 대한 개념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정보 시설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프랑스의 공공도서관은 비블리오테크**bibliothèque**에서 미디어테크**médiathèque**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프랑스에서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영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캄브레**Cambrai**시립도서관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미디어테크라는 이름을 건축물에 사용하였다.(Rouet, 1998) 파리 폼피두센터**Centre Pompidou**에 있는 공공정보도서관**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 BPI**의 디렉터 마틴 블랑-몽마이웨**Martine Blanc-Montmayeur**는 1975년 BPI가 개관되기 전 “BPI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과 같은 공간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목록실, 열람실, 서가 등의 기본적인 구성을 유지해오던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전통적 도서관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내부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에서 변화를 요구받게 된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공공간**公共空間, Public Space**의 개념을 다의적인 관념으로써 첫째, 공존의 형태로서의 공공장소**Public Place** 둘째, 대화와 토론의 장소로서의 공공공간 셋째, 상징적 형태로서의 공공공간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Quéré, 1995) 자크 산트로**Jacques Santrot**(푸아티에**Poitiers**시 시장)는 1996년 9월 발행된 푸아티에미디어테크**Médiathèque de Poitiers**의 안내서에서 “미디어테크는 도서관 이상의 새로운 공공장소로, 모두에게 문화와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공공장소로서의 미디어테크는 폭넓게 공유된 관념이자 정치적인 장소다. 즉, 다양한 개인과

공간

보편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장소다. 야니크 갱Yannick Guin(낭트Nantes시 문화부국장)은 “도시는 보편적 기능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출신이 어떻든 간에 모든 서민층이 지식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학교와 도서관은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은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장소가 된다. 이브 마르샹Yves Marchand(세트Sete시 시장)은 “도서관의 가장 큰 변화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임의 장소로서 이용자들에게 제안되는 가능성은 공통의 문화적인 활동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림 1 프랑스 국립도서관



크리스티안 보들로Christian Baudelot는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에 대해서 “실내는 중세의 도서관들과 같이 신성하고 집단적인 열람이 가능한 거대한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이용자의 시선 속 한눈에 들어오는 친숙한 공간이다”라고 하였다.(Baudelot, 1995)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단체 모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은 수평적인 4개의 볼륨과 수직적인 2개의 영



역으로 단절되어 있어 서로 다른 열람자들이 이용하며 출입 관리, 도난 방지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혹은 상징적인 경계들로 구획되고 세분된다. 공간을 통합하는 유일한 요소는 다른 층들의 연결을 확고히 하기 위해 거대한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킨 ‘공공광장’이다.

마틴 브르고Martine Burgos는 “카페 없이는 시립도서관도 없다”라며 (Burgos, 1996) 대화와 독서 사이의 사회적·상징적 관계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도서관 내의 카페테리아의 존재는 책 부근에서 대화를 유도하는 기회가 된다. 이는 역설하면 조용하고 지적 집중력의 장소가 의견 교환, 토론,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틴 브르고는 카페식 서점의 도서 제공이 불러일으킨 사교성에서 사회적 삶의 생성 과정 안에 독서 행위를 새기려는 강한 욕구의 표현을 발견한다. 이렇게 교환되는 대화는 도서관이 사적인 부분보다 공동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확증이 된다. 따라서 모임과 대화의 공공장소로서 도서관은 자신을 나타내는 장소이자 의견을 개진하는 장소며 동시에 정책을 수립하는 장소다.

그림 2 말메중 공공도서관 1층 카페



공공도서관으로서 미디어테크의 증가와 변화는 지역 주민의 삶에 있

어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디어테크는 하나의 도시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큰 힘을 가지므로써, 오늘날 미디어테크 디렉터는 가장 커다란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iorot, 1992) 즉, 미디어테크는 지역 주민 모두가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토론하는 장소이며 지역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공간의 변화

인터넷과 정보 기술에 따른 도서관 환경의 변화

인터넷과 정보 기술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기반의 쌍방향 통신을 기초로 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흐름에 따라 전자책과 온라인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지식과 정보 관리와 유통을 담당하는 도서관 서비스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더불어 IT 기술은 기존의 인쇄 자료 이용 위주의 공간에서 정보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으로의 변화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오늘날의 도서관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책과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온라인 시대에 정보는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시설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한한 온라인 세계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도서관과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인 출입, 대출, 레퍼런스, 직원, 자료 및 좌석의 배치 방식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1990년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출과 레퍼런스 검색 카드가 필수적으로 인접하여야 했지만, 컴퓨터 검색대가 설치되면서 이와 같은 배치는 불필요해졌다. 그러나 도서관의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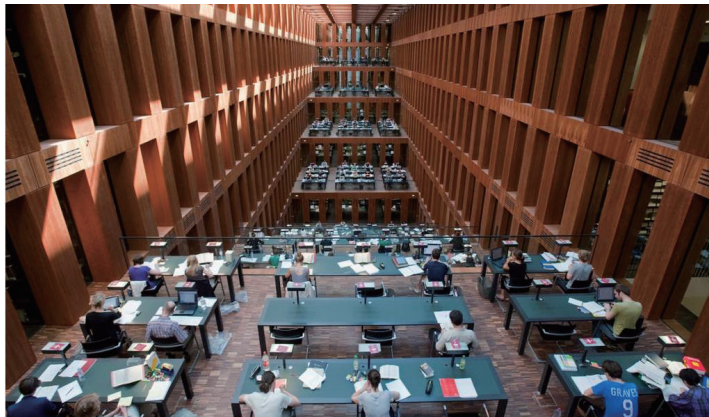


편적인 가치인 효율적인 자료의 이동,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공간의 명료성, 서로 다른 이용자 특성 간의 분리, 안전과 보안 등은 여전히 도서관 공간 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닫힌 공간과 유동적인 공간

우리는 최근 도서관 건물에서 닫힌 공간과 유동적인 공간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베를린의 야코프빌헬름그림센터Jacob-und-Wilhelm-Grimm-Zentrum(2009)와 같은 건물은 강력하게 정의된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19세기 형식의 고전적인 열람실의 존재감과 특징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즉 도서관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는 건물과 공간 배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3 야코프빌헬름그림센터 열람 영역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61500086@N03/46881345785>)

반면 센다이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2001)와 롤렉스 학습센터Rolex Learning Center(2010) 같은 도서관은 유동적인 공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공간

여기서 책의 존재는 강조되지 않고 가구는 경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행태와 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두 사례 모두 자유로운 테이블 배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작은 원탁에 자유롭게 앉아 대화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공간의 풍경은 사회적 접촉을 통한 원활한 상호 연결을 강조한다.

그림 4 센다이미디어테크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william_veerbeek/7704302894)

그림 5 몰렉스 학습센터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aronlorincz/15688106861>)



열람 환경의 변화

오늘날, 디지털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책을 읽는 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도서관 열람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열람 영역을 유지하지만 전자 정보의 유비쿼터스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열람실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오늘날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좌석은 열람실, 컴퓨터실, 개인 열람석 및 카페 등 많은 영역에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과 다르게 전문 및 대학도서관에는 여전히 독서와 공부에 대한 전통적인 이용자를 위한 좌석 개념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 6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헌트도서관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ncstate/8390613622>)

그림 7 프랑스 국립도서관



출처: Wikimedia Commons(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a/Biblioth%C3%A8que_Nationale_de_France%2C_October_2016_008.jpg/1280px-Biblioth%C3%A8que_Nationale_de_France%2C_October_2016_008.jpg)

도서관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열람석은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에 맞추어 디자인되고 있다. 이제는 도서관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람석은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전자 기기들은 도서관 열람석의 변화를 유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문 혹은 정기 간행물 열람실의 편안한 가죽 뒀백 라운지 의자가 도서관 좌석의 새로운 유형으로 빠르게 퍼졌다. 시애틀 중앙도서관(Seattle Central Library)의 라운지에 놓인 십자가 모양의 등받이를 가진 방향성이 없는 의자나 라이어슨대학교 학습센터(Ryerson University Student Learning Centre)의 가구는 이용자의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시애틀 중앙도서관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76501616@N08/9117643665>)

그림 9 라이어슨대학교 학습센터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Openbare Bibliotheek Amsterdam에는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미디어 열람 영역이 있는데, 이 또한 자유로운 형식의 좌석을 보여주는 한 예다.

그림 10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 미디어 열람 영역



그림 11 롤렉스 학습센터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nnova/4454333943>)

21세기의 도서관은 매우 다양한 좌석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휴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하이브리드 활동(hybrid activity)을 위해 디자인된 라운지 의자들은 한 개 이상의 업무와 자세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 형태, 재료로 만들어졌다. 로잔에 있는 롤렉스 학습센터에서는 각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는 빈백을 사용해



좌석의 개념을 간단히 해결하였다. 또 자유로운 좌석을 콘셉트로 한 라이어슨대학교 학습센터는 이용자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구를 배치하였다.

그림 12 라이어슨대학교 학습센터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alexguibord/16661900851>)

수도원의 기도실에서 유래된 전통적인 개인 열람석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하였다. 루이스 칸Louis Kahn이 1971년에 설계한 필립스엑서터아카데미도서관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의 개인 열람석은 충분한 작업 공간과 적절한 자연광, 프라이빗한 공간이 특징이다. 칸의 디자인은 입면 창호의 배치가 자연스럽게 가구에 이어지며 외부와 내부가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샬롱앙상파뉴Châlons-en-Champagne시 미디어테크조르주퐁피두Médiathèque Georges Pompidou의 개인 열람석과 같이 빛과 조명에 대한 설계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3 필립스엑서터아카데미도서관 개인 열람석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23280022@N08/6276901644>)

그림 14 미디어테크조르주퐁피두의 개인 열람석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개인 열람석은 통로 측 좌석들의 끝부분 혹은 벽에 마주 보게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오늘날의 학습 환경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카운터 형식의 한 방향 열람석은 개인 열람석의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수의 도서관의 벽과 난간에 설치된 카운터형 좌석은 한 방향을 보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반면, 남은 공간은 그룹별로 앉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자유대학교 문헌도서관



Philologische Bibliothek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의 카운터형 좌석은 구부러진 막지붕 위를 산란하는 빛을 따라 물결치는 파도의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의 카운터 좌석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중앙의 아트리움 모서리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그림 15 베를린자유대학교 문헌도서관 열람석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svenwerk/364906929>)

그림 16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 열람석



도서관 기능의 확장

전통적인 도서관의 핵심 기능은 현대의 도서관에도 존재한다. 도서관에서의 학습과 정보 검색은 변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기술의 출현은 오히려 도서관의 근본 목적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러닝커먼스’ Learning Commons라는 특성 있는 공간이 생겼다. 러닝커먼스 공간은 이용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만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커먼스’ Information Commons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러닝커먼스에 대한 개념은 대학도서관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다누타 A. 니테키 Danuta A. Nitecki(2011)는 대학도서관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보존자 역할에서 학습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intentional learner 을 지원하는 조력자 facilitator의 역할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도서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포메이션커먼스에서 새롭고 효율적이며 협력적인 이용의 형태인 러닝커먼스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기술과 유연한 디자인을 통해 학생, 교수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림 17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도서관 러닝커먼스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jgreer916/21421508370>)



21세기의 도서관의 변화는 이용자 그룹의 특성, 지역 사회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다. 카페, 상점, 전시 공간, 극장, 건강 센터, 방과 후 학교, 데이케어 시설 등 새로운 기능은 도서관의 기존 기능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레이아웃과 동선 계획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공간

1970년대만 해도 어린이실은 종종 작은 가구와 원색의 마감, 청소년 문학 캐릭터들의 벽화가 그려진 서가가 늘어서 있는 공간이었으나, 오늘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탐색하고 알 수 있는 공공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디자인은 스타일의 문제를 넘어서 공간 자체를 교육적 도구로 내세운다. 이러한 태도는 1970년대 후반의 아동발달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인 놀이를 통한 학습 개념에서 온 것으로, 20세기 후반에는 어린이실을 놀이터나 테마파크와 유사하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코펜하겐에 있는 오드루프도서관Ordrup Bibliotek(2007)의 어린이도서관은 높이가 다른 서가를 발판 사다리로 사용하여 이용자가 책 위로 물리적으로 올라가 탐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세리토스도서관Cerritos Library(2002)의 어린이실은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영감을 받은 학습 공간이다. 거대한 책들로 만들어진 입구에는 방 크기만 한 수족관, 복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바니안나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린이들에게 해양 생물, 선사 시대 생물, 열대우림을 소개하는 도구들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공공도서관이자 극장인 이매진온ImagineOn(2005)은 청소년을 위한 애니메이션·사운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공간

예술 탐구를 위한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스테이션(multi-media interactive stations)을 제공한다. 뉴욕 퀸즈 지역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디스커버리센터 Children's Library Discovery Center는 도서관 전체와 자료 영역에 분산된 인터랙티브형 수학 및 과학 전시가 특징이다.

그림 18 오드루프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



출처: Ordrup Bibliotek Facebook(<https://www.facebook.com/OrdrupBibliotek/photos/a.140233975999134/856222634400261>)

그림 19 세리토스도서관 어린이실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traderchris/5544879488>)



2008년,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협회(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YALSA)는 공식적으로 “청소년 이용자를 유치하고 도서관의 역할과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이용자 중심 환경이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어린이실과 마찬가지로 10대 또는 청소년 공간의 장식은 슈퍼 그래픽, 모던한 색상, 장난스러운 패턴, 가구 등으로 세련된 현대적 스타일을 반영하도록 진화하였다. 많은 도서관이 어린이실과는 대조적으로 10대들의 공간을 공부와 상호 작용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테이블, 컴퓨터, 때로는 학습용 개인 열람석은 개인의 공부와 연구에 적합하고 그룹화된 라운지 좌석은 공동 학습과 사교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0 뉴욕 공공도서관 해밀턴그랜지도서관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bplandrea/7875575064>)

2012년 새로운 10대 공간으로 개관한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NYPL)의 해밀턴그랜지도서관(Hamilton Grange Library)은 실내에서 이뤄지는 청소년들의 모든 행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408m²의 공간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비디오 게임용 유리 부

공간

스와 다양한 좌석 옵션에 맞는 관람석이 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칙은 없어 보이지만, 이 넓은 공간은 관리자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가시성을 제공한다.

도서관의 공생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 붐이 있었고,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기 이후 오늘날 유럽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공공도서관 계획은 생활밀착형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 커뮤니티, 레저, 상업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화 방식이다. 즉 공공도서관이 독립적인 단일 용도의 시설로 계획되기보다는 시장과 같은 일상적인 커뮤니티 거점이나 레저 시설과 결합하여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McCabe, 2000)

짧아진 여가에 많은 것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 계획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다양성 개념 역시 더욱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다양성이란 여러 가지 서비스와 미디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미디어의 다양성을 넘어서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포괄적 의미의 프로그램 다양성, 그리고 각종 미디어를 통한 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공간의 다양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공도서관을 다양한 시설의 네트워크로서 접근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지역 사회의 거점 공간,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의 입구 층과 최상층에는 카페, 스카이라인 바,



극장이 있다. 이용자들이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의 극장과 스카이라인 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열람실을 지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치는 좋은 제품을 먼 곳에 두어 건물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공간 마케팅(space marketing)을 생각나게 한다.

코펜하겐Copenhagen의 덴마크 왕립도서관Danish Royal Library의 공공 편의 시설은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과는 반대로 도서관 기능들과 분리되었으며, 도서관과는 별도의 입구가 존재한다.

메데인Medellin에 있는 에스파냐도서관Biblioteca España의 기능은 광장 plaza에 의해 연결된 3개의 건물에 수평적으로 배치되었다. 어린이돌봄센터, 커뮤니티센터, 강당 등의 새로운 기능이 도서관과는 인접하지만 분리되어, 연속된 건물에 있다.

그림 21 에스파냐도서관



출처: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127237180@N08/15475878730>)

이와 같이 도서관 계획에 기존 도서관의 기능과 새로운 기능을 통합시키는 것은 도서관의 크기를 확대하고 도서관에 대한 다원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은 지붕이 있는 개

방 공간'roofed open space, '공간들의 네트워크' 혹은 '도시의 거실'이라는 정의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단지 독서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접근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장소이며 교육과 레저, 오락이 복합된 문화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전 도서관과 비교해볼 때 개인의 자기 계발과 소통이 일어나는 커뮤니티의 거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Wu, 2005) 이와 같은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에 따라 이용자의 사회·문화·경제적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이 도서관 고유의 프로그램과 융합되면서 오늘날 도서관의 패러다임은 '도시의 공간'에서 '경험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공생과 공유의 도서관

기존에는 도서관 공급자(관리자)가 중요했으나 점차 이용자(대중)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공급자가 도서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척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자가 모든 공간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독립형 시설 대신 다른 시설과의 공유나 복합화가 중요해진 것이다. 도시 공간 구조와의 통합적인 연계 방안이 먼저 고려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거점 장소에 위치가 결정되고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공간이 공공도서관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이 집, 카페, 쇼핑몰과 유사하며 도시의 거실처럼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서로를 연결하여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지역 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나아가 도서관을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어를 통해 도서관에 오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새로운 용도와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 미래의 도서관은 물리적 자료를 적게 보관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자 공동체가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임호균 (2007). 공공도서관 공간체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프랑스미디어 테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Baudelot, C., Détrez, C., Léveillé, L., & Zalc, C. (1995). Lire à la BN, lireau plus haut niveau. Les bases sociales d'une polémique culturelle, 159-187.
- Burgos, M. (1996). Sociabilité et symbolique: lire, boire et manger. In Burgos, M., Evans, C., & Buch, E. (1996). Sociabilité du livre et communauté de lecteurs-Trois études sur la sociabilité du livre, 213.
- Lushington, N., Rudolf, W., & Wong, L. (2016). Libraries: A Design Manual. Birkhäuser, 49-57.
- McCabe, G. B. (2000). Planning for a New Generation of Public Library Buildings. Greenwood Publishing Group.
- Nitecki, D. A. (2011). Space assessment as a venue for defining the academic library. The Library Quarterly, 81(1), 27-59.
- Perrault, D., Favier, J., Mitterrand, F., Belaval, P., Edelmann, F., di Battista, N., ... & Buchanan, P. (1995).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989-1995: Dominique Perrault, Architecte. Birkhäuser, 27.
- Piorot, A. (1992). Nouvelles fonctions, nouveaux metiers: reflexions. 27-28.
- Poulain, M. (1993). La bibliothèque dans la cité. 55-56.
- Quéré, L. (1995). L'espace public comme forme et comme événement. Plan urbain, 93-110.
- Rouet, F. (1998). La grande mutation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2.
- Wu, J. (2005). The Library of the 21st Century. Long River Press, 186-188.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 개방과 공유 서비스

김혜련, 강민기, 문민숙, 박은주, 서혜민, 송민상, 엄소희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도서관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정보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구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서관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는 도서관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 도서관 장서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개방과 공유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하티트러스트HathiTrust, DPL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유로피아나Europeana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부터 소장 장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법률에 의거하여 온라인자료의 납본 수집을 개시하였다. 현재 1,6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적인 지식정보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식정보자원의 개방과 공유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된 국가 문헌 중 학술적·정보적 가치가 있는 주요 자료를 대상으로 원문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고성능 로봇 스캐너를 도입하고, 2017년에는 초고해상도 촬영 장비 스캔 스튜디오와 오버헤드 스캐너, 2019년에는 도면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차례로 도입하면서 고서, 고문서, 신문, 지도, 소형 실물 자료의 고품질 디지털화 서비스 역량을 매년 강화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장서 외에도 디지털화가 시급한 문화예술 기관, 단체, 개인 소장 주요 자료, 공공·대학도서관 소장 고문헌, 향토 자료, 희귀 자료, 정부 및 공공 기관의 희귀 정책 자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으로 153만여 책, 3억 5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화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계
책	496,192	133,482	265,946	178,850	256,403	208,151	1,539,024
면	135,215,959	30,216,833	60,191,664	39,483,930	53,877,704	31,292,282	350,278,372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는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협약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자료 이용협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760개소, 대학도서관 269개소 등 총 2,446개소다.(2020년 12월 말 기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이용자들도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표 2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이용협약도서관 현황

단위: 개소, 기준: 2020년 12월

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외도서관	계
도서관	760	269	423	72	846	76	2,446

국가전자도서관 및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은 국내 주요 도서관이 소장한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해 개발되었다. 개별 기관에 분산된 지식정보자원을 연계하여 디지털 원문을 통합 검색·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표 3 국가전자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 현황

단위: 책, 기준: 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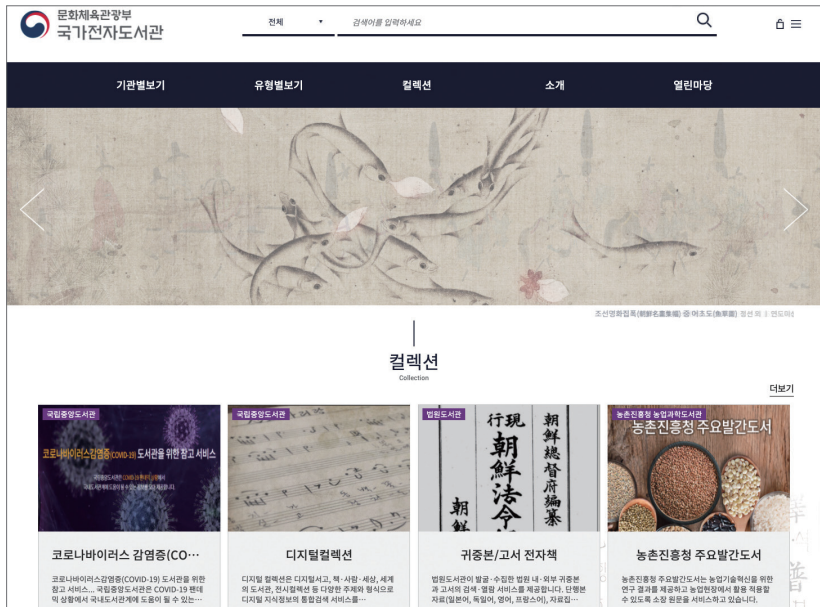
참여 기관	주요 분야	제공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관련 자료 및 인문과학 분야	20,119,568
국방대학교 국방전자도서관	국방 및 안보 분야	178,646
국회도서관	입법 관련 정보 및 사회과학 분야	별도 API 연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농학 분야	10,900
법원도서관	사법 분야	177,809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의과학 분야	599,687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과학기술 분야	492,32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연구정보	1,469,0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학술 연구정보	별도 API 연계
계		23,047,957



1997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현 KERIS)가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2년 ‘국가전자도서관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9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23,047,957책(원문 16,650,314책, 2020년 12월 말 기준)의 디지털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그림 1 국가전자도서관

<https://dlibrary.go.kr>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 East Asia Digital Library: EADL은 동아시아 관련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 이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간의 협력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3월,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4,045건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4,068건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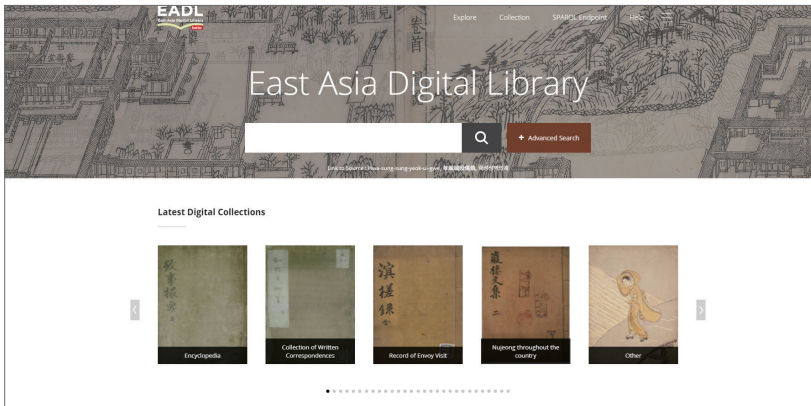
단위: 건, 기준: 2020년 12월

구분	서지데이터	디지털 원문	계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3,926	119	4,04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3,988	80	4,068
계	7,914	199	8,113

국가전자도서관과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은 향후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공유자원을 다양화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림 2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

<https://eadl.asia>



학술정보의 개방과 공유,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오픈액세스는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각종 연구 성과물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운동이다. 법적·경제적·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 성과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오픈엑세스 자원 공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골드 OA^{Gold OA}는 학술지를 오픈엑세스로 출판하여 누구나 무료로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 그린 OA^{Green OA}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가 리포지터리^{repository} 등에 자체 보관^{self archiving} 하고 해당 리포지터리를 통해 논문을 오픈엑세스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픈엑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OAK} 사업을 통해 리포지터리를 보급·지원하여 국내 학술정보의 그린 OA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OAK 사업에서는 현재까지 총 53개 리포지터리를 보급하였으며, 이들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학술지식정보자원 약 94만여 건을 통합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OAK 국가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 IR}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그들 기관이나 소속 연구자가 생산한 디지털콘텐츠 또는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축적하고, 이를 공공에 제공하는 디지털 저장소다. 초기의 리포지터리들이 소속 연구자들의 출판 전 또는 출판 후 논문과 석·박사학위논문의 축적에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기관이 생산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 이미지, 멀티미디어 저작물, 교수 학습 자료, 각종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한 디지털 레코드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유경, 성윤아, 정영미, 2016) 이에 OAK 사업에서도 2019년 리포지터리 확장형을 개발하여 연구데이터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각 리포지터리 운영 기관에서 연구데이터 아카이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데이터 메타데이터 지침’을 개발하여 공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 기관 리포지터리가 학술논문의 셀프아카이빙^{self archiving}뿐 아니라 기관 내 다양한 학술연구자원의 아카이빙과 개방·공유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표 5 OAK 리포지터리 보급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기관명	개수(누적)
2010	고려대학교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아주대학교 의학문헌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7
2011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13
2012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공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극지연구소, 서울연구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
2013	서울도서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3
20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명지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28
2015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국립생태원, 국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연구원, 한양대학교	36
2016	대전대학교,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전북연구원, 충남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1
2017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44
2018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개선 보급)	47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50
2020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한의약진흥원	53

한편으로는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지원 사업으로,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픈액세스 전환으로 주요 DB 유통사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학술지에 대한 접근성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학회에 학술지를 PDF 및 XML로 디지털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술정보의 유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리포지터리를 통한 학술논문의 공유·유통이나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에 있어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할 것이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이다. 학술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명확히 알아야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학술지



논문을 셀프아카이빙·활용할 수 있다. 학술지 발행 기관 역시 현행 저작권 정책 및 계약관계를 파악해야 향후 오픈액세스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KJCI)을 운영하고 있다. 학술지별로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공시하여 저자 및 출판사를 지원한다. 2020년 말 기준, 1,800여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이 등록·제공되고 있다.

표 6 OAK 운영 현황

구분	성 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OAK 국가 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구축(기관)	36	5	3	3	3	3	53
	메타데이터수집 (만 건)	45	9	6	9	8	8	85
	OA 저널(종)	86	-	1	-	1	14	102
	학술지 기사XML구축(편)	9,765	909	187	36	292	1,242	12,431
KJCI	학술지 저작권 DB 구축(종)	-	-	83	217	700	800	1,800

KJCI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저작권 관리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원문 접근 정책, 재사용 정책, 저작권 정책, 셀프 아카이빙 정책으로 구분된다. 원문 접근 정책은 리포지터리 등을 통해 원문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출판 6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공개할 수 있는 학술지가 있는가 하면 출판 즉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사용 정책은 학술논문을 재사용할 경우의 조건으로서,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원문 변경을 금지하는지의 여부 등을 의미한다. 저작권 정책은 저자와 출판사 간의 저작권 양도에 관한 정책

이다. 저자가 모든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도 있으나 저자와 출판사가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는 경우나 학술지 발행 기관이 저작권을 전적으로 양도받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출판된 저작물을 저자가 직접 리포지터리 등에 올려 무료 접근·이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허용하지 않는 출판사도 있고, 인쇄 전 버전

```
pre print
```

만 허용하는 경우나 반대로 인쇄 후 버전

```
post print
```

만 허용하는 경우, 모두 허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림 3 학술지 OA 저작권 정책 구분

	원문접근정책 (Reader Rights)	재사용정책 (Reuse Rights)	저작권정책 (Copyrights)	셀프 아카이빙 정책 (Self-Archiving)
OPEN ACCESS	오픈하고 없음	저작자 표시 자유로운 이용 가능(CC-BY)	저자가 모든 저작권 보유	심사 전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
CLOSED ACCESS	오픈하고 6개월 이하	저작자 표시-비영리(CC-BY-N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BY-NC-SA)	저자가 저작권 보유 (단, 몇 가지 제한사항 있음) 공동 소유	심사 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
	오픈하고 6개월 이상	저작자 표시-변경금지(CC-BY-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BY-NC-ND)	학술지 발행기관(학회)이 저작권 보유 (단,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 허락)	심사 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
	-	-	-	심사 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
	구독 회원가입 등	법률상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	학술지 발행기관(학회)이 저작권 보유	아카이빙 불가

출처: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http://copyright.oak.go.kr>)

국립중앙도서관은 OAK 사업을 통해 기관 리포지터리 보급을 중심으로 국내 오픈액세스 확산을 10년 가까이 추진해 왔다. 그간 오픈액세스



스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책과 제도, 연대의 움직임, 국내 대학 및 연구 기관, 연구자들의 고민과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학술 저널의 OA 전환을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수립할 것을 선언한 ‘OA 2020’에 관심표명의향서를 제출하고(2016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등 관련 기관들과도 협력해 왔다. 특히 2021년은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는 오픈액세스 논문으로 출판할 것을 의무화한 Plan S가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 국내에서도 오픈액세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8월,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연구지원 및 공공학술 정보서비스 기관의 오픈액세스 공동 선언」에 서명하고 국내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천명하였다. 국내외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학술 연구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그림 4 OAK 국가리포지터리 및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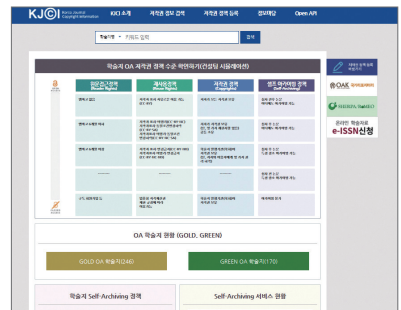
OAK 국가리포지터리

www.oak.go.kr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

<http://copyright.oak.go.kr>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개방형 연결 데이터 서비스, 국가서지 LOD

LOD(Linked Open Data)는 개방형 데이터(Open Data)와 연결 데이터(Linked Data)의 합성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웹에서 서로 편리하게 연결하여 웹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으로 발행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LOD는 사람의 이해와 활용을 전제한 문서 중심의 웹(web of documents)을 기계가 사람처럼 이해하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웹(web of data)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웹이 구현되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LOD는 가장 적극적인 형식의 데이터 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이병하 외, 2015)

표 7 국가서지 LOD 발행 현황

구분	서지				주제명	저자명	도서관정보	계
	단행본	연속간행물	온라인 자료	학술기사				
데이터	6,061,378	76,683	17,078,619	959,857	257,013	883,663	7,679	25,324,892
트리플 ¹	164,693,481	3,655,681	471,232,131	27,514,421	3,857,640	19,418,410	87,093	690,458,857

국립중앙도서관은 2011년 링크드 데이터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2012년 LOD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행본 서지데이터를 LOD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온라인 자료, 학술기사의 서지데이터 및 주제명과 저자명 전거데이터, 전국도서관 정보 등을 ‘국가서지 LOD’로 발행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25,324,892건

1. 트리플(triple): ‘자원명, 속성명, 속성명에 해당하는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트리플 구조 또는 트리플이라고 한다.



의 국가서지데이터를 LOD로 발행하였으며, 29개 국내외 LOD 제공 기관의 39개 데이터셋, 7,488,729건의 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와 상호 연결(interlinking)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서지 LOD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컬렉션은 국가서지 LOD에 SPARQL² 질의를 적용하여 구성된 서비스로서, 특정 주제나 자료의 형태 등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컬렉션 목록을 제공한다. ‘한국문학소설 중 외국어로 번역된 도서’, ‘바이러스와 백신’, ‘전시도록 컬렉션’ 등 다양한 주제 혹은 형식의 소장 자료를 SPARQL 질의로 추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KDC 주제별 탐색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단행본 메타데이터를 대상으로 KDC(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탐색 브라우저를 제공한다. KDC 4~6판의 트리구조를 이용하여 목³(1,000) 구분까지 탐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도서관 지도는 도서관 정보와 지도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찾는 도서의 표제나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으로 검색하면 소장한 도서관을 지도 상에 표시해 준다. 그 외 전국 도서관의 위치, 관중, 휴관일 및 홈페이지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고신문 디지털컬렉션은 기사 단위의 고신문 LOD에 SPARQL 질의를 적용하여 시대별, 주제별로 고신문 기사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군정기, 대한민국 시대별로 기사 목록을 볼 수 있으며,

2.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 RDF 질의어로, 자원기술프레임워크(RDF)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조작할 수 있다. W3C 컨소시엄의 RDF DAWG에 의해 표준화되었으며 시맨틱 웹의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위키백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Linked Data에서는 SPARQL 질의언어를 사용한다.
※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자원기술프레임워크): 웹상의 자원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규격으로, 상이한 메타데이터 간의 어의, 구문 및 구조에 대한 공통적인 규칙을 지원한다.(위키백과)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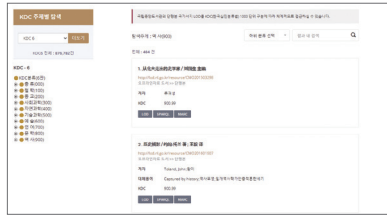
독립·해방, 대한민국 임시정부, 올림픽 등의 주제별로도 기사를 추출하여 볼 수 있다.

그림 5 국가서지 LOD의 응용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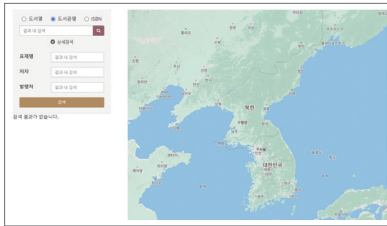
데이터 컬렉션



KDC 주제별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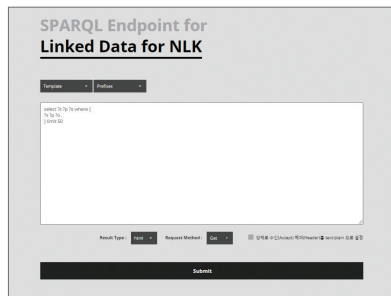
대한민국 도서관 지도



고신문 디지털컬렉션



SPARQL Endpoint



출처: 국가서지 LOD(<https://lod.n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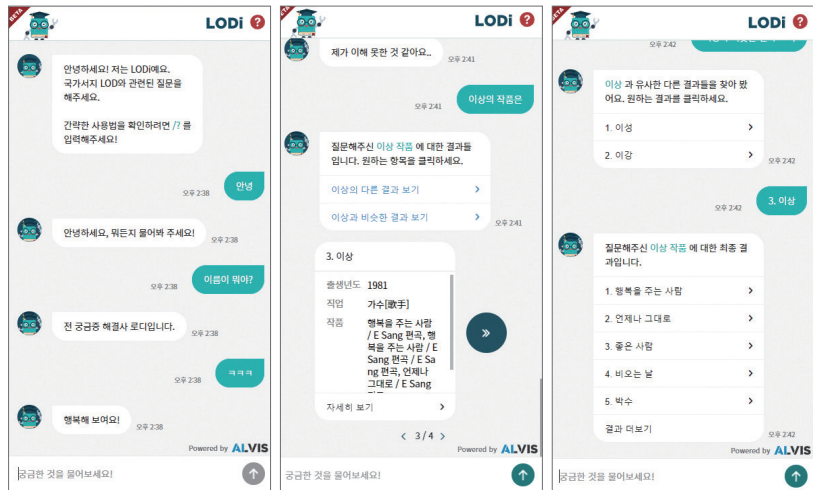
SPARQL Endpoint는 웹을 통해 SPARQL 질의를 할 수 있는 접근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서지 LOD에서는 질의를 통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이 가능한 SPARQL Endpoint, SPARQL 질의 내용의 작성을 도와주는 도구인 SPARQL Editor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들은 SPARQL Endpoint를 이용하여 질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포맷으로 받을 수 있다.

국가서지 LOD를 활용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서비스는 챗봇 ‘로디’LODi다. 로디는 국가서지 LOD 데이터를 활용한 대화 기반의 질의응답 서비스다. 국가서지 LOD에서 이용하는 RDF 기반의 온톨로지ontology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기법과 키워드 및 연관어 추출 기법 등의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림 6 ‘로디’LODi 대화 화면 예시



출처: 국가서지 LOD 로디(https://lod.nl.go.kr/home/LODi/LODi_popup.jsp)

패턴 매칭으로 학습된 서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챗봇이지만, 친근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일반 대화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로디는 도서관 자료 및 창작자 정보에 대해 더욱 이

용자 친화적인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검색 인터페이스와 다른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서지 LOD에서 만들어낸 지식 그래프의 활용성을 확장하고 개방형 연결데이터의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서지 LOD는 국가서지데이터를 의미 있게 연결하고 공개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준다. LOD는 MARC 중심의 서지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웹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분야 데이터와 협력할 수 있게 한다.(윤소영, 2013)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 LOD가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다.

그림 7 국가서지 LOD
<https://lod.nl.go.kr>





도서관 빅데이터 개방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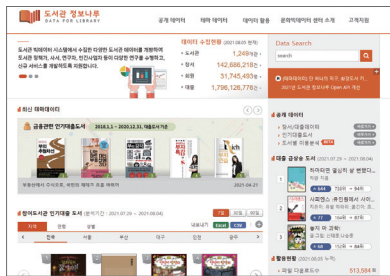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의 데이터를 개인, 도서관, 연구자, 민간기관 등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의 과학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선제적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활용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시스템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시스템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R&D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화 및 데이터 수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8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도서관 정보나루

<https://data4library.kr>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솔로몬

<https://solomon.data4library.kr>



‘도서관 정보나루’는 도서관 빅데이터의 주요 서비스로, 연구자, 개발자, 사서를 위해 다양한 도서관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학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고 있다. ‘사서의사결정 지원 서비스’Solomon는 도서관 내부 데이터인 장서, 대출, 이용자 데이

터와 온라인 서점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사서의 도서관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다.

표 8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현황

기준: 2021. 7. 2.

참여 도서관	장서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출 데이터
1,204개소	138,980,785건	30,854,945명	1,753,807,682건

현재 총 1,204개 도서관이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서 데이터 138,980,785건, 대출 데이터 1,753,807,682건, 이용자 데이터 30,854,945건을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용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021년 7월 2일 기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데이터를 웹사이트와 오픈 API를 통해 공개하여 공공도서관 및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9 도서관 테마 데이터 분석 사례

The screenshot shows the 'Data for Library'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공개 데이터', '테마 데이터', '데이터 활용', '문화빅데이터 센터 소개', and '고객지원'. Below the navigation, there is a search bar and a list of thematic data analysis cases. The cases are as follows:

이슈별 테마	지역별 테마	이용자별 테마	테마 데이터 요청
검색 <input type="text"/>			
데이터	데이터 유형	등록일	
<p>단 하나의 지구, 환경도서 키워드는 '지구' * 2018. 6. 1. ~ 2021. 5. 31.까지의 대출데이터 304,219,455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Excel"/> <input type="button" value="PDF"/> <input type="button" value="JPG"/>	2021-07-19	
<p>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국민의 재테크 흐름 바뀌어 * 2018. 1. 1. ~ 2020. 12. 31.까지의 대출데이터 4,135,239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Excel"/> <input type="button" value="PDF"/> <input type="button" value="JPG"/>	2021-04-21	
<p>2020 올해의 책! 손원평의 『아몬드』 * 2020. 1. 1. ~ 2020. 11. 30.까지의 대출데이터 58,238,593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Excel"/> <input type="button" value="JPG"/>	2020-12-30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https://data4library.kr/themaDataL>)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사적이고도 흥미로운 테마를 선정한 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이미지와 소스데이터를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우수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선진화된 서비스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밖에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넘어 전국 도서관의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종으로 확대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도서관 간의 데이터 간극을 해소할 계획이다. 참여 도서관의 데이터가 다년간 축적된다면 국내 도서관 및 독서에 관해 의미 있는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생산 자원의 개방과 공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분야의 학생과 연구자, 관련 단체나 기업,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산된 주요 자료와 데이터를 개방·공유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2020년 10월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리포지터리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산출물, 통계, 데이터셋, 발간 자료, 출장보고서, 홍보 및 전시 콘텐츠 507건이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리포지터리를 중심으로 내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리포지터리가 구축되기 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부 생산 자료의 개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

방과 공유에 적극적이었다.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발간 자료가 대표적이다. 『납본주보』, 『오늘의 도서관』과 같은 외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 외에도 『2021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매뉴얼』, 『IFLA 도서관 참조 모형: 서지정보의 개념모형』 등 업무 매뉴얼, 연구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도서관계를 위해 2020년 10월 ‘도서관을 위한 참고 서비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누리집을 개설하여 도서관에서 참고할 만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대응 노력, 법규 및 지침 등 다양한 참고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그림 10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www.oak.go.kr/nl-ir

The screenshot show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pen Access Korea' repository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placeholder text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and a search ic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navigation icons for '커뮤니티', '제목', '저자', '연구기관', '발행일', and '키워드', along with a '회원가입'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hree columns: 'Recent Additions', 'Top downloads', and 'KeywordCloud'. The 'Recent Additions' column lists several items with their titles and dates. The 'Top downloads' column lists items with their titles and download counts. The 'KeywordCloud' column displays a circular cloud of keywords including '리서치', '특성요원', '홍보', '연구', '고지도', '다시', 'Rda', '최현길', '향', 'Consul', '카카오', 'Rda', '최현길', '향', '다시', '고지도', '홍보', '연구', '특성요원', '리서치'.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된 『도서관의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은 누리집에 서비스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자로 제작되어 전국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해당 매뉴얼에는 감염병 유행 시 도서관 준비 사항, 도서



관 제한 운영 시 운영 방법, 도서관 내 감염환자 발생 시 처리 방법, 교육·전시 등의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련 각종 정부 지침 등이 수록되어 각 도서관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포지토리를 통해 생산 자료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 이외에도 ‘도서관 미래공방’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미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공유하고 있다. ‘VR 도서관’(가상현실 독서 체험 콘텐츠), ‘책에서 답을 찾는 인공지능 검색’, ‘인공지능 요약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연구자와 이용자들이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 코로나19 도서관 서비스

<https://nl.go.kr/covid19>

본회계국립중앙도서관 COVID-19 도서관 서비스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참고정보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도서관을 위한 참고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도서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제공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현황 4월25일 0시 중앙방역대책본부 기준

발발확산자 1776명 • 음 국내분생 1717명 • 4 해외유입 59명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p>국내외 도서관계 동향</p> <p>해외동향</p> <p>국내동향</p> <p>COVID-19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 정보를 제공</p>	<p>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p> <p>국립중앙도서관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과 더불어 향후 중장기적인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참고정보원</p> <p>지침규정</p> <p>연구조사보고서</p> <p>법정보원</p>
---	---	---

현재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리포지터리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이며, 미래공방 웹사이트와 리포지터리 웹페이지의 통합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생산 자원의 개방과 공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속의 시대, 도서관의 역할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은 2000년에 발매된 자신의 저서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을 통해 21세기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20년간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공유경제가 부상하고, 온라인 상거래와 구독 서비스가 일상화되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영향으로 ‘접촉’이 아닌 ‘접속’으로의 변화가 빠르게 확산하였다. 그러나 제러미 리프킨이 예언한 ‘접속의 시대’는 결코 장밋빛 미래는 아니다. 그는 ‘소유의 시대’보다 더 상업적이고, 부의 집중이 가능해지는 세상, 지식정보 자원이 과도한 독점에 매몰되고 문화가 상품화로 변질될 수 있는 시대의 위기를 경고하였다. ‘접속의 시대’일수록 지식과 문화의 비상업적 공유를 추구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도서관 지식정보자원과 데이터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방하고 공유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20).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2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윤소영 (2013).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259-284.
- 이병하, 김택훈, 박진호, 오원석, 이명진 (2015). 알기 쉬운 Linked Open Data.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유경, 성윤아, 정영미 (2016). 디지털 리포지터리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서 하티트러스트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443-464.
- Rkflin, Jeremy (2001). The Age of Access. 이희재 번역 (2001). 소유의 종말. 서울: 민음사.



경험

사회적 독서와 도서관 문화*

안찬수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 독서 모임

“코로나19의 확산은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강조한다. 사람들과 만남을 기초로 하는 독서 모임이 새해부터 어렵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잦은 휴관을 하였고, 만남을 자제해야 할 독서 모임은 주어진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 이전에 없었던 상황에 고민은 배가되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의식하게 만든 코로나19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한다.”

방송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40대 후반과 60대 중반의 여성들의 친

* 2019년 11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2019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주제 발표문 “왜 사회적 독서인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글임.



목 모임에서 파생된 서울 중구의 독서동아리 ‘화용수용미학 독서회’의 회원인 손순옥 씨가 쓴 글 “코로나19 틈새에서 책길을 찾다”¹의 한 대목이다.

손순옥 씨가 말하고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독서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독서동아리의 일상이었던 독서 모임이 조금은 특별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모임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열 체크, 방문기록장 그리고 손소독제로 서로서로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시기에는 오프라인 모임 대신 온라인 모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각자 집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Zoom’과 같은 익숙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만나기도 하였다. 함께 떠나곤 했던 문학 기행이나 탐방 여행도 취소되거나 움츠러든 형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책을 함께 읽어오던 사람들과 생각의 숲을 자유롭게 걷고 싶다는 소박한 갈망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40대 직장인, 가정주부, 50대 피아노 강사 등 다양한 여성들이 매주 모이는 경기도 부천시 ‘신나는가족도서관’의 독서동아리 ‘독서풍경’의 오수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우리의 독서 모임”²의 한 대목을 또 인용한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해보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고 앉아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모임을 떠올리며 코로나19도 우리 독서 모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도 눈빛을 보며 안부와 책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한 해였다.”

1. 2020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독서동아리 글모음, 『독서동아리가 쓰다』 100p.

2. 앞의 책 103p.

오수정 씨의 말처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독서동아리 모임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 글은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 독서, 막을 수 없는 독서 모임, 사회적 독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독서 및 도서관 문화 진흥과 사회적 독서

‘사회적 독서’라는 말을 낯설어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독서’란 무엇인가. 이 말이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와 도서관 진흥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된 것은 2019년의 일이다.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과 같은 해 4월에 발표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은 각기 ‘사회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정책 영역을 개인, 공동체, 사회적 포용, 미래 등 4대 분야로 나눴는데, 그중 첫 번째 영역인 개인 영역에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이라는 정책 과제 아래,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 서비스 확대”라는 핵심 과제로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하였다. “기술적 발달에 따른 반쪽짜리 소통, 고립된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니 “공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성숙한 사회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독서-현장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함께 읽기’ 독서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토론형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읽기-쓰기-토론을 연계시키는 독서 프로



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며, 독서-현장 연계형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가용 자원의 연계를 통해 배움의 현실 적용, 실천이 가능한 학습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은 ① 사회적 독서, ② 포용적 독서복지, ③ 생활 속 맞춤독서, ④ 미래독서생태계, ⑤ 독서 정책 협력 체계 등 다섯 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사회적 독서 활성화’다. 그리고 사회적 독서 활성화의 첫 번째 중점 과제가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이다.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독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독서의 가치와 사회적 독서, 독서공동체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적·정서적 행위에 초점을 둔 독서 패러다임을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여 독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그림 1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① 개인적 읽는 행위 중심과 소유	① 함께하는 사회적 독서와 공유
② 선별적 독서 기회	② 보편적인 포용적 독서복지
③ 가끔 읽는 간헐적 독서	③ 일상화된 생활 속 독서
④ 전통적 양적, 종이책 독서 중심	④ 질적, 디지털 융복합 독서
⑤ 법적 기반 미흡한 분산된 체계	⑤ 제도화·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큰 틀에서 보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이나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모두 “개인적 읽는 행위 중심과 소유에서 함께하는 사회적 독서와 공유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한 정책 과제이자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 두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가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서나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된 말이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감염 관리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과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접촉 가능성을 줄여줌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즉,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전파를 감소시키는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해왔다. 이에 따라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였으며, 상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문화인류학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연구를 펼쳤던 에드워드 홀 Edward Hall이 언급된다. 홀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네 가지 주요 공간 영역이 있다고 제안했다. 포옹을 주거나 받는 것과 같은 친밀한 거리(0.5미터 미만),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좋은 친구를 위한 개인 거리(약 1미터),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사회적 거리(2~3미터),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공개적인 거리(5미터 이상). 이는 인간과 문화적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근접학*proxemics*의 영역이다.



과학 저널리스트 그렉 밀러Greg Miller가 2020년 3월 16일 『사이언스매거진』에 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기사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심지어 사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이 사망 위험을 29%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하였다. 이렇듯 근접학에 근거를 둔 과학적·의학적 연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거듭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은 누가 처음 사용한 것일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라면 ‘물리적 거리 두기’physical distancing라는 말로도 충분히 뜻을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글의 주제인 사회적 독서와 관련하여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자.

사회와 사회적 독서

‘사회적’이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는 ‘social’이란 말은 라틴어 ‘socius’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 ‘socius’의 뜻은 공유하는sharing, 참여하는joining in, 참가하는partaking, 연합하는associated 식으로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료companion, comrade, 동맹ally, confederate처럼 명사로도 쓰인다.

번역어翻譯語 성립과 관련된 책을 보면,(예를 들어, 야나부 아키라柳父章, 『번역어 성립 사정』) ‘사회’社會라는 말은 영어의 ‘society’에 대응하는 번역어로 성립되었다. ‘사회’라는 말은 원래 일본어에는(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없는 말이었다. 말이 없었다는 것은 ‘society’에 대응하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본인들이 ‘society’와 같은 의미를 지닌 유럽어를 처음 만난 것은 에

도 시대에 네덜란드의 ‘genootschap’³이다. 일본인들은 이 단어를 처음에는 사귄, 모임 ‘交ワル 集マル’ 또는 ‘寄合又集会’ 등으로 이해했다. 에도막부 말기에 일본인들은 프랑스어 ‘société’와 영어 ‘society’를 동아리(仲間), 쌍懇, 무리(리)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이런 번역어는 ‘좁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society의 ‘넓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1868년에 펴낸 책 『서양사정 외편(西洋事情 外編)』에서 ‘society’를 ‘인간교제(人間交際)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당시 메이 지유신 이후 ‘회사(會社)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 등이 모여 번역어에 대해 고민했던 ‘명육사(明六社, 메이로쿠샤)처럼 ‘○○사’라는 단체 등이 만들어졌다. ‘사회(社會)라는 단어는 명육사에서 발행하던 『명육잡지(明六雜誌)』에서 ○○사의 사(社)와 모임의 회(會)를 합쳐 쓰기 시작하면서 퍼졌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학문의 권유(學問のすすめ)』(1872)에서 일본인들이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세간(世間)에 대비되는 새로운 말로 ‘사회’를 쓰고 있다. ‘사회(社會)라는 매우 추상적인 한자어가 성립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았다. ‘individual’- ‘개인(個人)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번역어로 성립되었다.

사회의 번역어 성립 과정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야나부 아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서 한자가 지니는 이러한 효과를 나는 ‘카세트 효과’라고 부른다. 카세트(cassette)란 작은 보석함을 이르는 말로, 내용물이 뭔지 몰라도 사람을 매혹시키고 애태우게 하는 물건이다. ‘사회’와

3. 영어로 번역하면 ‘society’다.



‘개인’은 예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 ‘카세트 효과’를 갖는 말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어의 성립 사정을 생각해보면,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서적 또는 지식 습득을 위주로 하는 개인적 독서 중심의 패러다임을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고 나누며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여 독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꽤 까다로운 과제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쓸 때, 이 일본인들이 만든 한자어 뒤에 남겨져 있는 ‘society’가 여전히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독서의 사회성과 사회적 독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독서’를 개념적으로 ‘개인적 독서’와 대비되는 것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 개념이 손에 잡히듯이 이해되는 것이 아닌 듯하다. 본래의 의미가 마치 한자 조어 뒤에 숨어 있는 듯하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 독서에 대해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독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행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방, 거실, 카페, 공원,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행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독자 홀로 읽는 것도 글쓴이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독서도 사회적인 행위다. 도서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독서는 이러한 독서의 사회성과는 다르다. 즉, 독서는 그것 자체로 사회적인 것이지만, 사회적 독서라는 말의 사회성은 무언가 다른 것을 내용으로 품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개인적 독서를 위해서는 책과 독자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사회적 독서를 위해서는 적어도 둘 이상의 독자가 있어야 한다. ‘책 읽어주기’를 생각해보자. 책과 책 읽어주는 독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듣고 있는 독자가 있다. 책 읽어주기는 도서관, 학교, 서점에서 널리 퍼진 사회적 독자인 셈이다. 사회적 독서의 일반적인 형태는 독서동아리를 통해 함께 책을 읽는 것일 테다. 우리가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읽는 목적은 독자가 다른 독자와 만나 읽은 것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독서의 특징

사회적 독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사회적 독서는 독자의 경험을 확장한다. 독자와 독자가 서로 연결되어 생각과 생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독서를 통해 개인적 독서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읽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질문을 던진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이들은 책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한 번 더 읽게 된다고 말한다.

둘째로 사회적 독서는 공감과 공유의 독서다. 사회적 독서를 통해 우리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책을 읽기 전후에 이루어지는 공감을 공유하며, 확장된 경험을 공유하고, 더 폭넓어진 사유를 공유하게 된다.

셋째로 사회적 독서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독서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이른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이용해 책을 함께 추천하기도 하며, 책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기도 한다. 그리고 북콘서트, 독서 토론 모임 등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독서(오프라인)와 함께 각종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사



회적 독서(온라인)도 있다.

넷째로 사회적 독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이며,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역의 문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가정, 학교, 마을, 사회 그리고 도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와 규모의 사회적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One City One Book는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전개되어온 사회적 독서의 한 형태다. 최근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학기 한 책 읽기도 사회적 독서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40여 개에 이르는 ‘책 읽는 도시’들도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2018년에 출범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현재 27개. 회장 도시는 서울 금천구) 독서의 달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세계 책의 날 기념 행사, 대한민국독서대전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다섯째로 사회적 독서는 사회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시각장애이용 녹음도서 제작을 위한 낭독봉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일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한 독서 활동이다. 낭독자는 책의 모든 내용(이를테면, 마음표와 심표조차)을 목소리로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듯 사회적 독서는 사회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왜 사회적 독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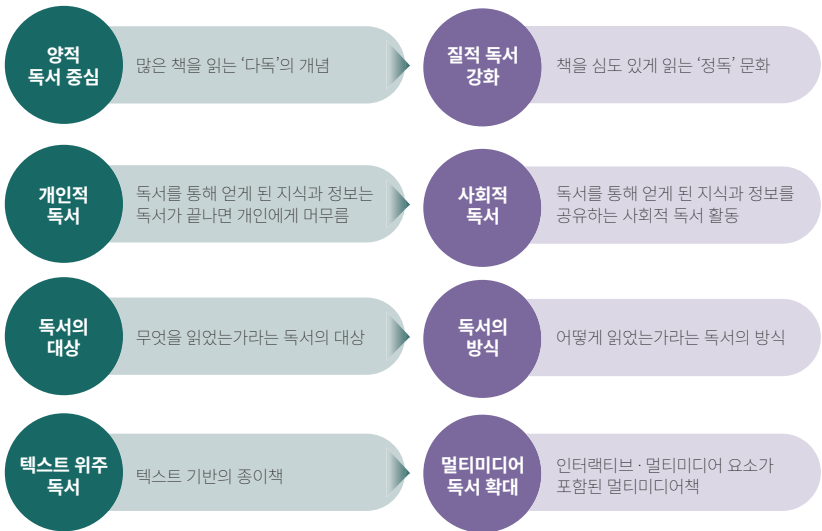
그럼 왜 도서관발전계획이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모두 사회적 독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독서 행위의 변화’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어찌 보면 독서 행위가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책도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로는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개인의 독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개인적 독서를 북돋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차원으로는 독서문화진흥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판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독서문화진흥정책이 펼쳐졌지만, 기본적인 독서율조차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바꾸지 못하였다.(성인 연평균 독서율 2015년 65.4% → 2017년 59.9%, 연평균 독서량 2015년 9.1권 → 2017년 8.3권, 월평균 서적구입비 2015년 16,623원 → 2017년 12,157원,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5년 29.2% → 2017년 22.2% 등)

그림 2 독서 행위의 변화



셋째로 독서 문화를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주목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비해 우리의 행복 수준이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



고 급격한 개인화로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새로운 독서의 가치에 초점을 둔 사회적 독서인 것이다.

코로나19와 사회적 독서 그리고 도서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을 맞아 도서관은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 방역 기준이 강화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하면서도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도서관이 최소한의 서비스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각종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회원의 수를 늘린다거나 전자책 대출 권수를 늘리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애써왔다.

이른바 ‘언택트’ 시대에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도서관 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서관 서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새로운 도전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더 다양한 전자 자료를 확보하고 도서관 공간도 언택트 시대에 맞게 재구조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지 모른다. 이런 과정에서 도서관이 새롭게 사회적 독서를 실천하는 하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도서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화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사회적 독서’ 활동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네트워크
인터뷰

이호신 글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교수

임봉성

파주시중앙도서관
기록관리팀 팀장

**도서관, 시민의 기억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파주시중앙도서관 민간기록물 사업



최근 들어서 공공도서관은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를 발굴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즘 도서관들이 주목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사서는 평범한 도서관은 장서량을 늘이는 데 골몰하고, 좋은 도서관은 더욱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지만, 위대한 도서관은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많은 자료와 좋은 서비스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때에 비로소 위대한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중앙도서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은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구축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지역 사회 내의 귀중한 기록을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재조명하면서 공동체의 기억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중앙도서관 민간기록사업의 담당자를 만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더욱 소상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호신 파주시중앙도서관의 민간기록물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임봉성 파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극적이고 역동적이었던 우리 역사 속에 다양한 배경이 되었던 곳인 만큼 다양한 이야

깃거리와 역사적인 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접경 지역이고, DMZ를 품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 최초의 임진강 거북선 기록(『조선왕조실록』, 태종 13)¹에서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도시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기억과 기록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이런 파주의 유·무형의 자산은 빠르게 소실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고, 특히 보편적인 역사에 가려진 평범한 시민의 삶과 기억이 개인의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주시중앙도서관의 민간기록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파주시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록과 삶의 기억을 하나로 모아서 지역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신 전통적인 도서관의 사업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서관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또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임봉성 파주는 지리적·문화적으로 수많은 이야깃거리와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야깃거리와 역사적인 자원 가운데에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1.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13년(1413년)에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 귀선(龜船)과 왜선(倭船)으로 꾸민 배가 해전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다 보니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역할을 도서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보존하는 것도 도서관의 아주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니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한 것은 급격



이호신,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교수

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서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 것들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휴먼 in 파주’라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공적 기록에 포함되지 못했던 평범한 파주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로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파주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열두 분의 이야기를 채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개인 기록뿐만 아니라 봉일천4리 마을 기록으로 그 범위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결과물들은 더욱더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1층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순차적으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전시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전시는 자연스럽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물이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채록, 전시, 만남이 출판으로 이어지고 시민과의 공유와 소통이 확대되면서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진 것이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 계기라면 계기일 것 같습니다.



이호신 이 사업은 단순히 기록물을 찾아서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시민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의 역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도서관이 기록물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임봉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오늘날 도서관은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모든 정보가 책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책이 꼭 필요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죠. 이런 사정은 도서관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서관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우리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과 시민의 공동체였습니다.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 속으로 들어갈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여러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휴먼 in 파주’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록에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지역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기록 속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과는 다른 일이었고, 지역 사회 내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료를



찾고 만드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역 내 유관 기관들과의 사업 중복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히 지역 사회 내에서 반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임봉성, 파주시중앙도서관 기록관리팀 팀장



이호신 많은 도서관이 파주시중앙도서관의 민간기록물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서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봉성 앞서 말씀드렸던 ‘휴먼 in 파주’를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시민의 삶 속에 어떻게 도서관을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록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기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모여 시민채록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채록단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록단 구성원은 모두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아카이브, 구술사^{口述史}2와 관련된 강좌를 통해서 전문적

2.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 연구의 방법론을 말한다.

인 식견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주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을 수소문해서 찾고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재조명한 내용을 정리해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채록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을 추려서 전시물로 만들고, 어르신들이 간직하던 물품들과 함께 전시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성한 일기,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가계부, 표창장과 감사장, 옛 신분증 등 다양한 기록물들이 함께 전시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나중에 다시 도서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3년 정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 결실을 하나로 묶어서 발간한 것이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라는 책입니다.

파주시 민간기록물 사업관련 출간 자료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2019)

『DMZ 희망의 길을 걷다』(2020)

『파주 DMZ의 오래된 미래, 장단』(2020)

『리비교와 장마루 사람들』(2020)

『파주 모던타임즈 1950~1980』(2021)

그림 1 파주시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자료집





이호신 파주시중앙도서관의 기록물 사업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임봉성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향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본래 시민의 지적 성장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히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적 성장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기록물 수집뿐만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시민의 성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민 기록네트워크, 시민채록단, 시민기록추진단 등을 꾸리고, 시민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의 성장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커다란 힘으로 되 돌아옵니다.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도록 지원하고 또 다른 활동을 연계해주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다른 활동과 연결해 주는 역할에만 머무릅니다. 세부적인 일의 추진 과정에도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간섭하게 되면 시민의 자발성이나 의욕이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공무원의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시민의 지적 성장이 바로 도서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이호신 문화행정이론 가운데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의 공적 지원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요.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행정적인 간섭과 연결되면 그 자율성이 손상되어서 창의적인 결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데에서 비롯된 원칙입니다. 파주시중앙도서관에서는 그 원칙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사업을 통해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 대표적인 기록물을 몇 가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임봉성 무엇보다 ‘휴먼 in 파주’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가 대표적인 사례이겠지요. 이 책에는 시민채록단이 인터뷰한 파주에서 오랜 세월을 사신 열 분의 생애와 기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출입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어르신, 마을사랑 농사꾼, 짚풀 공예 장인, 조리움의 가위손 이발사, 문인**文人** 등 우리 고장의 역사가 될 소중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집된 기록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책자 형태로 발간해서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또 기록물 원본 자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시민이 간직하고 있는 파주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는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이 오래도록 간직해 온 빛바랜 사진과 앨범, 일기를 비롯해 다양한 기록물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은 사라졌거나 잊힌 지역 명소나 역사를 되살리는 데 실마리가 될 기록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져 버린 학교나 유치원의 흔적도 있고, 40여 년을 파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급여명세서가 빠짐없이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모 사업에서 발굴한,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파주군



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들은 파주의 역사를 거시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보물에 가까운 자료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 가운데 DMZ와 관련된 기록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가운데 파주와 관련된 것들만 추려 자료집으로 발간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작업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표 1 민간기록물 사업 진행 과정



출처: 파주시중앙도서관



이호신 방금 소개해주신 기록물들이 시민과 공유되는 방법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임봉성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전국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을 견학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도서관이 주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도서관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문화원이나 박물관, 기록관에서 우리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 기록물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집한 기록물들을 보관할 서고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예도 있고, 기록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도서관은 그런 면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시민과의 관계 형성이 일상인 공간이라서 기록물을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수집하는 목적이 기록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과 기록을 통한 기억의 공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로서의 집단 기억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집단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서가에 기록물을 비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이 시민의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전시회나 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주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준비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술채록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은 내 삶이 그래도 괜



찮은 것이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채록단으로 참여했던 시민은 시민역사가로서 감춰져 있던 인물과 사실을 발굴하는 숨은 주역이라는 점에 만족합니다. 준비 과정 자체가 이런 의식들을 확고하게 다지고, 그 준비의 결실로 얻게 되는 전시 자료와 단행본은 그런 느낌들을 훨씬 더 강화해 줍니다. 전시회를 관람하고 단행본을 접하는 시민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웃의 역사라는 점에 훨씬 더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 과정과 결과 자체가 바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기억을 만드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와 출판은 단순히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공유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수집된 모든 기록물을 시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는 대로 모든 기록물을 시민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표 2 수집 기록물 현황

기준: 2021. 6. 30.

수집 기록물	수 량
기록물수집공모전	979점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사진 기록	757점
체코, 폴란드, 스위스 대사관 DMZ 사진 기록	402점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사진, 문서, 영상 기록	770점
국가기록원 사진, 문서 기록	534점
지역 신문 자료	247점
시정 필름 기록	91,457점
기타 기증 · 이관 · 구매 기록	1,432점
총 계	96,578점

출처: 파주시중앙도서관



이호신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시민과의 공유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나 출판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셨는데, 이러한 활동 이후에 도서관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임봉성 전시나 출판은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작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는 창구가 됩니다. 준비 과정을 자신들이 작업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지적 성장을 도모한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채록단의 경우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도서관 1층에서 전시회를 개최왔는데, 이러한 이벤트가 지역 사회로 알려지고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를 발간한 이후 2019년에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분야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성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연구자들이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을 찾는 경우 역시 증가했습니다. 또 시민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서관 내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고, 학예연구사와 기록연구사 그리고 전담 사서까지 배치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민간기록물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적 기반까지 확보하게 된 것



입니다. 이런 성과는 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자체가 시민과 공유하는 활동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신 사업을 통해서 발굴되고 수집된 기록물들은 일종의 공유자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임봉성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우리도 기록물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록물 정리는 책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들에게도 다소 낯선 영역입니다. 도서관에서 도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체제를 기록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예산을 투입해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조만간 보강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서 시민이 기록물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 시스템 자체를 시민과 공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의 많은 공동체도 활동기록 관리에 관심이 있지만,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해서 소중한 기록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시민이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록물 정리와 메타데이터 작성에 소요되는 인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진행한 사업에서 공동체 기록물 메타데이터 정리를 위한 인력과 물품을 실제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주중앙도서관의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파주 시민 스스로가 기록물을 기록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이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파주시를 이해할 수 있고, 파주 시민의 기록 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기록물이 꼭 인쇄물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물 가운데 일기나 편지, 사진 등 종이로 작성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파주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물에 가까운 실물 자료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폐가제 서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양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실물 자료들을 보존하는 데 적합한 수장고와 전문 장비들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호신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은 국내 도서관에서는 매우 선도적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임봉성 사실 이제 첫걸음을 떤 것이라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유형의 실물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물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주시의 역사 문화 기록, 박물관, 도서 등을 집약적으로 수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파주기록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파주시에 적절한 건물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수집된 기록물이 더욱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영역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파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센터로써 우리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호신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자 하는 다른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봉성 이 사업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 도서관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의 성과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통해 귀중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 행정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과는 사업의 추진 과정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분이 과정보다는 성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지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점을 상기해 기록물 관리 사업도 시민의 지적 성장을 끌어내는 과정으로 접근한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더욱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의 지적인 성장이 곧바로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경험한 시민이 도서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옛 기록을 수집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흔적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생각합니다. 기록물 수집의 초점을 지나치게 과거에 맞추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기록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피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파주시중앙도서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기록물의 관리가 단순히 과거를 담고 있는 물건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도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물을 수집하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를 모두 공유하는 과정이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야 우리 도서관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이 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성 찾기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추천 자료

총론 - 공유의 가치 이승원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데이비드 볼리어 저 | 배수현 역 | 2015년 | 갈무리

이 책은 공유와 커먼즈의 개념과 역사에 관한 친절 한 설명 및 공공 공간, 디지털 공유재, 지식 공유 등 다양한 공유 활동에 관한 풍부한 사례를 담고 있다.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박배균, 이승원, 김상철, 정기황 편 | 2021년 | 빨간소금

이 책은 서울 공덕역 근처의 경의선 공유지에서 발 생한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사례 를 통해 시민 주도 공유 활동과 커먼즈 운동의 의미, 국공유지에 대한 국 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등 공유와 커먼즈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 를 제공한다.



도서관과 공공성 신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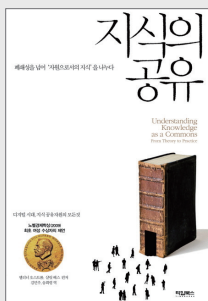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Ex Libris: New York Public Library

프레더릭 와이즈먼 | 2017년 | 다큐멘터리

123년의 역사, 92개 분관, 12주간의 기록. 다큐멘터리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는 별도의 내레이션이나 인터뷰 없이 12주간 뉴욕 공공도서관 92개 분관에서 벌어지는 도서관의 일상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과 함께 지식을 경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본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 박서현



지식의 공유: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엘리너 오스트롬, 샬럿 헤스 편저 | 김민주, 송희령 역
| 2010년 | 타임북스

커먼즈를 평생 동안 연구해온 엘리너 오스트롬 Elinor Ostrom이 동료 샬럿 헤스 Charlotte Hess와 공편한 『지식의 공유』는 학술 지식을 포함한 지식이 어떤 점에서 커먼즈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저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의 공유』는 ‘지식 커먼즈’ knowledge commons의 특징

이 무엇이고 지식 커먼즈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 오픈액세스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자원 김영미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URL: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개발원에서 구축한 한국데이터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종합개편안이 반영된 UN SDGs 231 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내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선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한국의 SDGs 진행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법·제도 안효질



Open access policies and requirements in Horizon 202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2020년 11월

URL: https://ec.europa.eu/info/open-access_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이다.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른 오픈액세스 정책의 취지,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오픈액세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간 임호균



Hjørring Bibliot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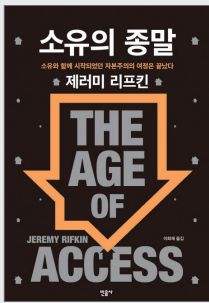
예링 공공도서관 | 2015년 5월 20일

URL: <https://youtu.be/AxPkKrkYq0Q>

도서관을 공생과 공유의 공간 개념으로 바꾸어버린 예링 공공도서관Hjørring Bibliotekerne은 각각의 공간으로 이용자를 구분하거나 자료를 나누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공간이다. 다양한 연령과 취향의 이용자들 요구를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만족시키며, 이용자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활동적이고 다채로운 문화 활동과 이와 동시에 학습과 명상이 한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 김혜련



소유의 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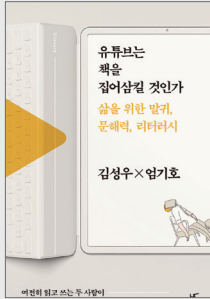
제러미 리프킨 저 | 이희재 역 | 2001년 | 민음사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미래 사회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접속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산업, 지식, 문화 분야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미래학 저술임을 감안하고 읽어보면,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급속히 변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예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가 예상한 ‘접속의 시대’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 대안을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경험 안찬수



📖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김성우, 엄기호 | 2020년 | 따비

문화 연구자 엄기호와 응용언어학자 김성우, 두 사람이 리터러시에 대하여 나눈 대담이다. 두 저자는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말한다. ‘리터러시’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공공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자도생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으로서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리터러시의 변동과 그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할 적기”라고 말한다. 사회적 독서의 관점에서도 두 분의 논의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관계와 맥락을 품는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통권 제395호 | 2021

기획·편집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발행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 590-0799
팩스 (02) 590-0546
누리집 www.nl.go.kr
디자인·제작 채널원투원

비매품

ISSN 1011-2073(Print) 2733-8177(Online)

DOSEOGWAN

Vol. 395 | September 202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Korea
Tel (02)590-0799 Fax (02)590-0546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됩니다.



ISSN 2733-8177

발간등록번호 11-1370104-000003-08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대한민국 지식음 모으고, 담고, 잇다